

제343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6 호

국회 사무처

2016년7월4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1
- 1. 경제에 관한 질문 ..... 6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 간사에 김도읍 의원, 박완주 의원, 김관영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에 박대출 의원, 박홍근 의원, 김경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에 윤영석 의원, 김경협 의원, 이태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에 윤재옥 의원, 박남춘 의원, 권은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일 민병두 의원 등 121인으로부터 조선·해운산업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상호 의원 등 3인 외 163인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세균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민병두 의원 등 121인으로부터 조선·해운산업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0시05분)

○의장 정세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지난번 정진석·김종인·안철수, 세 분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경청하였습니다. 사회양극화와 고령화시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았습니다. 현실 인식과 해법 제시 중에서 특히 현실 인식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식이 비슷하다고 안도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매우 위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실제 OECD 평균보다 1년 동안 300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1년에 37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합니다. 한국 남성들의 유효은퇴 연령은 72.9세이며, 심지어 7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지런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든 노동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의 고소득층 수명이 평균 86세인데 강원도 화천군 저소득층의 수명은 71세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득양극화가 건강양극화를 거쳐서 수명양극화로 이어지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이라는 책에서 김승식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다. 도대체 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의 다수 국민의 삶이 고단하고 불행한 것인가?”

현실 인식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총부채는 2분의 1로 줄어든 반면 가계부채는 4배로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2배로 늘어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소수의 강자는 더 강해지고 다수의 약자는 더 약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 아니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운영해 왔던 해법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만든 정책들과 결별하지 않고서 현실을 한 걸음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져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다시 살아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는 열악해졌으며 30대 재벌에는 700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였습니다. 그중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은 일관되게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용이 유연해야 기업들이 해고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져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30만 노동자 그리고 임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사회입니다.

이렇듯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똑같은 해법,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제도인 파견제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지하실까지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더 이상 이전의 해법은 대안이 아닙니다. 실패한 해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내 와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짚어진 책무입니다.

현실 인식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법의 차이가 난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종된 것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경제에서 정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많습시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제발 헌법을 지키자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전화기, 다른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 자화상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회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주요 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4년마다 한 번씩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데 국회가 지난 10년간 연속으로 신뢰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 국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극복해법이 2년 전 세월호처럼 가장 약자부터 먼저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일 뿐입니다. 불의한 국가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정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 나가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그 규모로도 세계 최고이고 그 대우 수준도 가장 열악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층층이 쌓여 있는 계층구조에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급여 차이가 나고 옷 색깔과 식권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차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고용인구 속에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무한정으로 허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실상이었던 일본도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여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

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동시에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기구를 설립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폭발 직전의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만큼 낙수효과 이론이 유행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강자가 살아야 약자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노동시장의 약자, 즉 노동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후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축출되거나 퇴각한 노동자들로 자영업 인구가 폭증하였습니다.

이제 자영업 종사자는 600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미국의 4배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6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0만 대군이던 대한민국 국군을 넘어서는 인구입니다.

그리하여 음식점 절반이 1년 내에 문을 닫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은 중산층 몰락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이 대자본의 갑질로부터 보호받고 공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자영업의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하고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차별을 시정하여 노동시장을 떠난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의사가 있다면 아마 병 주고 약 주는 의사일 것입니다. 사회안정망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실업부조를 늘리는 것은 시급하지만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실업수당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병을 내버려 둔 채 약만 주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1차 분배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장에서 생긴 격차를 온전히 2차 분배, 즉 복지로 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차별을 완화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교육에서의 정의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사회 신분의 고착화를 막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장한 모든 나라들의 특징은 평등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육칠십 년대 고교평준화 등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등한 교육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지위가 자식의 대학을 결정하고 부모가 부유할수록 자녀의 대기업 취업률도 높아졌습니다. 가난하면 학업과 돈벌이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평등한 교육을 통한 자수성가의 꿈은 한낱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대로 교육은 이제 부와 가난이 세습되고 승계되는 통로로 전락하였습니다.

교육정의의 과제가 너무도 많지만 저는 오늘날 가지만 제안드립니다.

입시를 격화시키는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고교 서열화와 중학교 서열화까지 부추기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폐지해야 우리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한국보고서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시 적용하는 규정 및 차벽·물대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의 노조 설립 어려움, 삼성 등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을 언급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기소를 예로 들면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형사기소는 사실상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보고서는 차벽 설치와 집회금지 규정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1조

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에 이 권리규약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은 1990년 4월 이 규약을 비준하였고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의 인권보장 상황이 열악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국회가 비준한 조약이 실현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협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 인상, 즉 증세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인 것입니다.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합니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 출신으로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이자 IMF 최연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세계적 석학 라구람 라잔은 지난 2003년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말로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으로 자본가집단을 지목하며 지나친 부와 소득의 집중이 사회를 후퇴시킬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나 재벌과 대기업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고 이 위기의 시대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

이 경제위기의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놓인 많은 과제가 있지만 또 다시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자는 개헌 주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 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또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해 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추가 지붕을 기와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만 맡겨 둘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우선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각 당과 차기 대통령후보들이 책임 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이 국회인데 더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개혁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특권은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읍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합시다.

또한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읍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 최저임금의 다섯 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의원회관 5층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 중 한 분에게 여쭙어 보니 새벽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약 13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주말에 특근까지 해야만 14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수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삽시다.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만듭시다.

아무도 박수 안 치시네요.

(박수)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행하는 각종 활동에서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시청문회법 통과야말로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나아가 20대 국회는 공직자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공직자들과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1200여 명이 인사청문 대상이고 그중 600여 명이 상원 인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명에 영향을 행사하는 자리 중에 인사청문 대상은 예순세 명에 그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는 훨씬 적은 스물세 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공직 책임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고 임명되어 나중에 말썽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상시인사청문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그리고 상시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특권은 내려놓고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정의당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이 모든 국회 개혁과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저희 정의당까지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많은 부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모든 당이 마음으로 함께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보장 법안입니다.

지금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지난달 말로 강제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진상조사는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수십 일을 묵묵히 구조에 힘썼습니다.

이 문제에 여와 야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여야 모두가 나서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박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비록 여섯 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투표에서 7.23%, 172만 명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였다면 저희들의 의석수는 스무 석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원내 유일 진보정당답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행보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노회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3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갑 출신 이종구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산업은 이제 한국 경제에서 도려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부로 이렇게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적 격차는 심화돼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일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나오시지요.

올해 1~4월 중에 세금이 작년 동기 대비로 18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다 힘들어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 들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을 때 1년에 한 3조 정도 법인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1~4월 중에 걷은 세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의 6년 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6년 치. 그러니까 1/4분기 동안에 6년 치를 더 걷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으로 나오는 효과에.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선거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금을, 새누리당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총리신데 선거철에 이렇게 민심 이반을 야기하는 이러한 세금 걷기를,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들하고 서민들이 많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세금을 5조 이상씩 걷고 있던 말이에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치들을 다 취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비과세·감면들에 대해서 개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 세수도 96.9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로 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5년도 말에 소비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세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가 늘었던 것이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비과세의, 또 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수가 원활하게 확보가 돼서 앞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총리는…… 세금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전가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서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데에 세금이 전가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8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5조가 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걷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법인들한테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하청업체들의 임금이 적어진다는지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이번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예요.

대통령만 너무 추종하지 마시고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돼야 돼요. 총리가 내각이나 그냥 관할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총리는. 총리가 좀 나서야 된다고요, 공격적으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문제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지금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에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를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융 부분을 적으로 불렀던 좌파 정권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랑

드 대통령이.

저는 총리께서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듯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눈앞에 닥친 경제 난관을 추진력을 갖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이 수출이고 아래의 붉은색 선이 수입입니다. 수출입이 동시에 줄어 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형적인 축소 균형입니다. 이러한 축소균형은 무역의 82%나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정말 위기예요, 위기. 이게 진짜 위기예요.

수출·수입을 동시에 늘려 가지고 또 무역흑자가 지금보다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수출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브렉시트는 아시다시피 관세장벽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보호무역주의로 갈 가능성도 많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지금 내각이 빨리 세워야 돼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걱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보여 주기식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는 총리로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계 경기가 어려워져서, 세계 경기 부진에 따라서 교역이 감소하고 또 저유가로 인해서 단가 하락이 생기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들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출 확대를 통해서 무역규모를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서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의원**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의

요체는 신고립주의에 의한 관세장벽 그리고 환율전쟁입니다. 이러한 무역장벽과 환율전쟁에 대비해서 총리께서 할 일이 참 많아요. 환율 정책 같은 것은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특히 한국은행 총재도 불러다가 얘기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국과 같이 관리형 환율제도 쪽으로 가 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의원** 작금에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신산업을 키워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인자동차·AI·로봇·3D프린팅·드론, 이런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총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 청산적인 구조조정이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신산업, 혁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필요한데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그러한 전략, 이러한 것을 한번 국민 앞에 밝혀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과거는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양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또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10+1, 그러니까 10개 업종을 먼저 했고, 그 뒤에 또 추가해서 미래자동차니 지능정보니 로봇이니 또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이런 열한 가지의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지원 또 세계지원뿐 아니라 규제프리존들을 과감하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이 신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또 현실적인 뒷받침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월평균 1일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스타트업 기업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4대보험 납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 저해요인이다,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대보험 때문에 고용을 못 하겠다,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고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상당히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문제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4대보험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은 유예대상이나 또 유예기간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2015년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자료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300인 이상 기업을 편의상 대기업이라고 하고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49.7%,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35.0%, 이런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굉장히 크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종구 의원** 국민들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양극화가 심하다,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기재부에서도 우리가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니계수 같은 것을 보면 지니계수로 볼 적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내년도 대선의 제일 큰 어젠다가 격차 해소입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우리 3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을 할 겁니다. 금년 말까지 제가 보기에 격차 해소를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대선을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부가 이러한 것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먼저. 그런 다음에 당에서 각 당이 이것을 거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말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 이러한 것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

○**이종구 의원** 이제까지 것 말고, 이것보다 아까 정의당 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좀 잡히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놓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문제,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문제, 둘째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셋째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숙련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

해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모 간 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이런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하청 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 각종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서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EITC—근로장려세제입니다—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정액의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을 지급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균형성이라든지 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식의, 그래서 그것으로 지난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돈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하는, 소위 어디 밥집 가서 먹고 친구들과하고 놀겠다는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돈들이 합리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방향으로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구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총리 나오시지요.

오늘 국토부장관이 안 나오셨지만 하여튼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구 의원**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청약 열기가 높고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가지고 약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부 지

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또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극화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해 왔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것을 좀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좀 차별화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의 재건축 같은 데하고 지방의 미분양 하는 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LTV나 이런 정책 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마켓을 분화해서 대응하는, 조금 세심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부동산 시장이 요 근자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과열되는 곳과 또 오히려 굉장히 침체되는 곳으로 나뉘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를 차별적으로 봐서 양측의 균형을 좀 맞춰 가는 정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지금 테헤란로 주변의 빌딩들이 3개, 4개, 5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못 들어 봤습니다.

○**이종구 의원** 이게 뭐냐 하면 임대료가 안 돼 가지고 3개월, 4개월, 5개월 임대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실이 아주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테헤란로 주변만 아니고 그 주변에서 좀 더 들어가면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주택 위주로 돼 있었던 말이지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좀 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앞으로 울산이나 거제 같은 데는 더 심할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주택과는 달리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같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구 의원** 이걸 못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직접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같이 강구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흘 전 블랙시트 충격과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표출되면서 1%만 살찌워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고속성장시대를 끝내고 6% 성장마저 위협받는 신창타이, 뉴노멀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 우리의 수출액이 1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총 29회에 걸쳐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빛내서 집 사라’ 이렇게 부추긴 결과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적 시한 폭탄을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자리 사정도 최악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12.5%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34%, 체감 실업자가 179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실핏줄, 600만 명이 훨씬 넘는 자

영업자들의 사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낸 어르신들의 노후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 49.6%, OECD 평균의 무려 4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에서 부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높아지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득이 지지부진한 현상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정부가 조세·금융·환율 정책 등을 총동원해서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정책을 펴 왔지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대기업만을 지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낙수효과라는 것이 그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그것의 최우선 결과나 순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도 기대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효과들을 기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소득분배지표에 있어서도 지니계수 같은 것은 개선이 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이 이러한 정책들,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정책들이 낙수효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게 안이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심화만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텅텅 빌 때 재벌들의 곳간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MF와 OECD까지 한국 정부의 대기업 위주 수출 정책,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10대 그룹 96개 상장 계열사의 실물투자액은 2009년 26조 원에서 2013년 7조 원으로 무려 75%나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70조에서 503조 원으로 폭증했

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8년간 그렇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투자가 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투자가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늘지 않고 있고, 지적하셨습니까마는 최근에는 수출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게 온정주의로 대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선진국 일류기업을 그대로 베끼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야 되는데, 선도형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재벌 3·4세 오너들은 혁신형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가 아니라 리스크 매니저(risk manager)로서 역할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시장으로 나가려는 대신에 국내의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내부 일감 몰아주기, 성공한 중소기업 영역 침탈, 벤처기술 탈취 등 손쉽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수출 대기업 지원 정책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출 대기업을 지원 정책만을 저희가 고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 내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서 제약도 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리스크를 좀 테이크를 하고 좀 더 퍼스트 무버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에는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

을 위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창조경제라는 걸 통해서 벤처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구조개혁을 통해서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는 데도 지금 힘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표 의원** 오죽하면 IMF나 OECD까지 나서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노력이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살리는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이 정답입니다. 가계소득의 증가가 소비 증가로, 소비는 투자로, 투자는 일자리로, 일자리가 다시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학자이신 부총리께서 국내외 학계나 야당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대통령께 ‘경제 운용 패러다임,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좀 더 강화합시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개 법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13개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가 달성이 됐으니 끝내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법안, 나머지 법안도 다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민주화만이 또 경제 운용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 입법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을 계속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부총리 말씀은 지금 경제가 대체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쪽 끌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진표 의원** 좀 분명한 목소리와 분명한 스탠스를 가지고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하는 그런 부총

리가 돼 주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진표 의원 재벌의 특권적·탈법적 행태,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반칙과 횡포를 일삼지 못하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1년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기업은 덜 집중화되고 덜 관료화되고 덜 수직화된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재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인 지배를 통한 불합리한 의사결정 시스템, 이 재벌 오너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오너 리스크가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변질 가능성, 항상 존재합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소유구조, 지배구조, 의사결정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는 일,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동 개혁, 공기업 개혁,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이런 박근혜정부의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희망했던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해관계자의 저항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입법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쨌든 노동 개혁이라든가 공기업 개혁에는 좀 더 가일층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개혁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인 재벌은 그대로 놔두고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벌, 낙하산 경영진, 금융권, 감독기관 등의 오래된 비리 유착구조 그건 그대로 놔두고 노동자보고만 개혁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벌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서

노동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달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사실상 추경 편성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미적미적거리다가 24일 브렉시트 발표가 난 이후에야 마지못해 나서는, 또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 그게 도대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사실상 요구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전부터 금융 정책, 즉 통화신용 정책과 재정 정책이 지금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있는가를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전혀 갑자기 그때 이후로 속도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실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또 추경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추경을 하도록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그만큼 안이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재부 따로, 한은 따로 정책 운영의 엇박자가 계속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진표 의원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민들이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우리 정부가 통화신용 정책 당국과 재정 정책 또 그 외의 다른 여러 정책 운영기관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협조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가 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과감한 재정 정책에 사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의 추경도 재정보강을,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이 20조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사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상으로 계속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의 적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것은 또 재정건전성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감한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내외적인 필요성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추진하는 데도 그런 것이 원인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추경 하려면 제대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절벽에 막혀서 흡수저, 헬조선 이렇게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분야 일자리,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려면 아무래도 2, 3년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진표 의원** 추경 규모가 10조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 단순 계상해 보면 1조 원이면 월 200만 원 일자리 4만 개, 10조 원이면 4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를 전액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군인, 소방,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공공부문 인력은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하는데 다만 이것을 얼마나 할 것이냐, 너무나 급격히 할 수는 없는 또 한계는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추경 요건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느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더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 추경은 급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급하지 않으면 뭐 하러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진표 의원**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니까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서는 혹시 ‘입대 채수’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들어 봤습니다.

**○김진표 의원** 취업 절벽에 가로막힌 대학생, 청년들이 요즈음 군대 들어가기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입대를 위해서 3수, 4수, 5수가 예사입니다. 징병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모병은 더 심합니다.

우리 군이 과학군·기술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문부서관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기, 전자, 통신, IT 등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군기술직 부서관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까지 병사는 약 한 13만 2000명이 감축이 되고 반대로 군기술직 부서관들은 3만 5000명을 증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하여튼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진표 의원** 또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CCTV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감시당한다고 반발했고 실제로 그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에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하면 보육교사들 부담도 덜어 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아이들도 웃고 엄마도 안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경력단절 여성도 자격 소지를 하고 있다면 채용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보육과 보조교사의 채용도 확대를 하는 중입니다. 2016년 올해 예산에는 약 한 1만 2344명 목표로 55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예산은 또 그 자체로 국민들이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것대로 별도로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력단절 여성 또는 가능하다면 이런 어르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한결 같이 각 정치단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교육의 질을 관리해야 할 것이 누리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누리과정의 재정조달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려고 합니까?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1조 7000억 듭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원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미 일정부분 합의를 봐서 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에 의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지금 올해, 적어도 2016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이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 관련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에 때문에 이것을, 누리과정을 여기에다 넣는 것은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이번에 이것을 세입경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

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이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방 교육재정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 의원** 저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지방재정특위를 만들 거고 거기서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할 테니까 그때 출석해서 같이 토론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진표 의원**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그런 민생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학자니까 잘 아시지만 모든 경제 정책은 반드시 코스트(cost)가 있고 베니피트(benefit)가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할 때는 그 위기관리에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을 강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이종구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매사를 순탄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가 가지고는 위기관리가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선배 부총리님께서 이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정말 명심해서 들었습니다.

○**김진표 의원** 미국, 영국 등 사례에서 보듯이 스타트업 활성화,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입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우리가 흔히 벤처 이것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당연히 아이디어, 반짝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에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는 항상 실패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그 기본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제도상으로는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 의원** 금융개혁이 선결 과제입니다. 담보 위주의 낡은 금융 관행,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가 안 됩니다. 그것을 혁파해 가지고 기

슬금슬금을 활성화하는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M&A 시장을 활성화해서 한번 실패해도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벤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창조경제를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부터 외쳐 왔는데 잘 안 되니까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17개 지역을 재벌들에게 나눠 맡겨서 18개의 창조혁신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눠먹기 식 분산배치로 인해서 첨단벤처 성공에 꼭 필요한 기술 융·복합 등의 집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도 지금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상당한 성과는 거두고 있다 이렇게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기업이 한 1000개 정도 되고 투자 유치도 약 2400억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집적 효과가 좀 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런 것이 항상 뭐가 최선으로 지금 다 잘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김진표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 어느 나라가 벤처 육성을 하는데 전 국토에 고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벤처 육성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그 지역 별도의 특성을 좀 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판교에는 소위 말하는 제2창조경제밸리, 제2판교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을 해서 거기서 또……

**○김진표 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벌들보고 스타트업 활성화의 주도자가 되라고 하는데 재벌들의 오랜 벤처기술 탈취 관행,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미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기술 탈취에는 아주 지금,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허를 좀 잘 활성화하는 이런 것도 노력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례가 나타나면 사후적으로도 당연히 저희가 징벌적 과징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도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 감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청년들의 취업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과 끼, 깡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저는 유권자들에게 ‘더불어 잘사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20대 국회의원 모두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제1당으로 선택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당당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에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듣기에 달콤한 청와대 여론만 듣지 마시고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국회의 공론과 광장의 절규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정읍·고창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논쟁이 아주 심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성엽 의원** 보육대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리 논쟁도 논쟁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전망에 비해서 실적이 대단히 떨어진 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전망에 비해서 실적이 1조 3000억 부족했습니다. 2014년도 4조 7000억 부족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려 10조 원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2015년의 10조 원 가까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경제성장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세수가, 재정교부금 규모가 낮아졌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서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최근만 해도 작년이 2.6%였고요. 2013년이 이점……

○유성엽 의원 8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약 한 3%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예, 3% 불과합니다. 빠듯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평균을 전부 한다면.

○유성엽 의원 앞으로도 더 떨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한때 세계 11위까지 올라왔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17위까지 추락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한 11위는 맞습니다.

○유성엽 의원 11위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경제 규모는.

○유성엽 의원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닙니다. 17위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체……

○유성엽 의원 그러면 몇 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11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말에.

○유성엽 의원 17위로 떨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성엽 의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 봐서는 17위가 아니고 11위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것은 사실은 2015년은 14년에 비해서 전체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올라간 셈입니다. 13위에서 11위

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성장률이 높지도 않은데도 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도 역시 규모가 작아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제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제 정책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실패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성엽 의원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경제 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는 그 자체만 봐도 그것은 실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치는 것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 2015년 같으면 2.6%라는 것은 저희로서도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경제 정책의 실패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1980년대에 외환위기 때문에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심한 진통을 겪을 때도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대외여건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의 중남미 국가하고 우리가 주로……

○유성엽 의원 아니,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 등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옳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유성엽 의원 그래서 자꾸 대외경제 여건 탓하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주장이고 책임 회피지요.

경제 정책이 실패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실패가 뭐냐 이걸 찾아야 경제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경제 정책이 100점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그나마 이와 같은……

○유성엽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성엽 의원 정부는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부진해지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이명박 정부 때지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경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7년도 말에 5.0%에서 현재의 1.25%로 낮췄습니다. 화폐발행액 역시 2008년도 이후 2015년까지 2.9배 증가시켰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였습니다. 성장률의 5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재정지출을 2007년에 235조 원에서 2012년 325조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3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경상 GDP 성장률 5.7%보다 더 높았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국가채무 590조 원으로 재정위기의 위험성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는 녹색과학기술,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내세워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R&D 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4.9%에 달해서 세계 1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넷째,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내내 외환 매입, 해외 투자 등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 정책을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연평균 920원이었던 환율이 현재는, 한때는 1200원을 넘어선 적이 있고 최근에는 1150원대를 넘나들면서 당시보다 25% 가까이 높습니다.

다섯째, 경기가 장기간 부진해지며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부는 화폐발행 증가와 금리 인하 등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정책, 고환율 정책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내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시 호조를 보였던 수출은 장기적으로 점점 부진해졌고 최근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의 일자리만 다소 증가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률은 12.5%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온갖 정책들을 동원해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의 각각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이 전 세계에 왔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이후로 아마 경제 정책에 국제공조라는 것이 좀 정착이 되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내린 처방이 확장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의 일종의 합의와 같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금리와 재정이 그와 같은 확장적인 패스를 우리도 걸어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R&D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정책들을 다 동원해서 다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냐 이 말씀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유성엽 의원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왜 그런 거예요, 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미국의 환율보고서에도 반영이 됐던 것이고 요즘은 어떤……

○유성엽 의원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고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기재부장관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율은 이른바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것은 국제적으로 바로 우리가 보복을 당하거나 큰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 환율을 만든다든가 고환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해……

○유성엽 의원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손쉬운 탁상머리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생산성, 특히 한계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성장률을 낮추게 됩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은 지난 10년간에 55.0%의 프랑스, 52.18%의 그리스, 49.28%의 이태리,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경제난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32.84%의 스위스, 34.68%의 호주, 낮은 실업률로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공공지출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약 한 30% 좀 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최근에 그것 계정 개발했잖아요, 얼마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유성엽 의원 얼마예요? 우리나라 공공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공공지출이 어디를 포함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조건을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얼마예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은 저희가 약 한 400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전체 1500조의, 재정지출이……

○유성엽 의원 저는 그 공공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얼마인지도 바로 대답을 못 하는 기재부장관한테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48.07%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아마도 공기기업들의 지출을 포함한 것일 것입니다. 직접 재정지출은 아시다시피 지금 400조가 되지 않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것 포함해야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공공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유성엽 의원 공기기업 부문까지도 공공부문으로 봐야지요, 그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엽 의원 자, 좀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양적 완화도 경제를 살려내기는커녕 오히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뒤에는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할 위험성을 키울 것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역시 경제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경기가 부진할 때 투자하면 자칫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회복하지 못 하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아까 부인했지만 고환율 정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에서는 수출을 오히려 감소시켰습니다. 오히려 원자재와 각종 시설재의 수입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서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내수를 심각하게 위축시켜서 경제를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마지막 그 내수의 문제가 환율 정책의 문제라고는 저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성엽 의원 아니, 환율이 올라가면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내수가 위축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 한 부분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성엽 의원 아니, 한 부분을 따지든 전체를 따지든 그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나 또 바뀌어지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제가 일단 전체가……

○유성엽 의원 자꾸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성엽 의원 이렇게 해 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 봐도 안 되면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시행해 왔던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깊게 생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제가 변명한다든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나마 최선의 정책 조합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있을 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야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유성엽 의원 자, 좀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DP 구성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출 13%, 내수 87%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정부가 지금까지 펼쳤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은 경제난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세계사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사에서 성공했던 정책들과 실패했던 정책들을 탐색해서 실패한 정책은 피해 나가고 성공했던 정책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분명히 지금껏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전혀 실패했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공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더 성

공할 정책을 자꾸 생각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뭔가 마련해 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저는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희망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환율 정책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 특히 일본과 독일과 대만 등이 장기간 저성장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을 국제수지 흑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면 중장기적으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물가 안정과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국내 경기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에 임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려 내기 위해서는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인하는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울 정책수단도 국제 경쟁력과 성장 지속력을 확보할 정책수단도 아울러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서는 복지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풍토를 바꾸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배복지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분배가 점차 개선된 나라는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반면에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가운데 분배에 치중한 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1990년을 전후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경제난이 가중되자 복지비 지출도 크게 축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배가 성장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하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장도 지속 가능해집니다.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하듯이 경제에서도 수순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잘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선순환해 가도록 잘 조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부총리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같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부인하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저희가 생각이 다른 것은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엽 의원** 그래요.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부총리 간의 질의 답변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잘 들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시각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물론 국회의 의견도 듣고 또 국민들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어떤 경제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많이 연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우리 경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금 박근혜정부까지 다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지금 3%도 이제 못 채우고 2% 중반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 성장률 얼마로 전망하고 계시지요, 수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2.6% 정도로 수정을……

○**유성엽 의원** 더 떨어져 있잖아요, 2% 중반대로.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유성엽 의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검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또 국제시장이 함께 가는 것이 성장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면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데 엄청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제경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원가들, 자재들에 대한 원가들이 필요한데, 원가들에 대한 적정성 유지가 필요한데 지금 유가가 저유가로 해서 기본적으로 경제기반을 좀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견들을 더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의원** 아까 부총리께서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정책을 이게 실패했다……

○**유성엽 의원** 물론 뭐 실패를 정부 당국자가 국회에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만 실패가 아니다, 그러면 뭘니까, 이게? 실수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을 실패다,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다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성과가 덜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올해 잘하고 앞으로 성과가 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 더 채워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방향이 틀렸고 내용이 잘못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헛것이잖아요, 그것.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부총리 말씀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뭔가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성장률이 2% 중반대로 떨어

어진 이유를? 왜 떨어졌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경기가 어렵고 저유가가……

○유성엽 의원 자꾸 대외경제 여건 탓하지 마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나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나라들의 성장세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의원 총리께서도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담세율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을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특이한 정부기관 2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장정책분석청, 기술혁신청이 그것들입니다.

성장정책분석청은 경제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했고 어느 것은 저해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에 따라 성장을 촉진한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성장을 저해한 정책은 폐기합니다. 또 기술혁신청은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 성장에 기여한 과학기술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과학기술은 지원에서 배제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경제정책이 세계 최고의 담세율 속에서도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성장정책분석청과 기술혁신청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와 성장이 적정한 균형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청을 설립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따르고……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청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좀 제가……

○유성엽 의원 현재 평가 기능을 개선하고 보강할 필요는 인정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과 그것을 기구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구를 만드는 것에서는 정부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국가 기능의 전반적인 수행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성엽 의원 제 질문의,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적인 기구에 대한 말씀은 마시고.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 설치 여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땀을 흘리고 인내해야 얻어지듯이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도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땀을 흘리고 일시적인 고통을 인내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들과 책상머리의 손쉬운 정책들만 난무합니다. 이래서는 경제를 살려 낼 수 없습니다. 국민은 달콤한 정책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웃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땀을 흘리고 인내해야 경제를 살려 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과 공직자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인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땀을 흘리자고 말할 용기를 정치권이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 용기를 보여 줬을 때 국민은 정치

인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국민은 드디어 정치권에 감동할 것이고 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믿을 것입니다. 국민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믿으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 출신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의원**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입니다.

몇 해 전부터 따뜻한 남쪽 바다인 우리 남해안 조선벨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비가 내리더니 최근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모진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할퀴고 지나가는 조선소 야드에는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근로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것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각종 환경오염이 깨끗이 정화되듯이 우리 조선산업도 구조조정의 태풍을 슬기롭게 견뎌 세계 제일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해외순방 잘 다녀오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김한표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500원 한국은행권 지폐가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보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보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다음 울산 미포만 항공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조선소 건립을 위해서 영국은행의 차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바로 우리 조선산업의 시작이었고 또 초심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 조선산업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조선산업 실적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에 조선해양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몫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박 발주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를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었

습니다. 또 중국과의 저가 수주 경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정부와 또 해당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구조개혁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5000억 불 되는데 그중에 560억 불, 10% 넘는 비중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주력 산업 제1위였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IMF 때,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워크아웃 졸업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대우조선해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대우조선이 국내 최초 전투잠수함을 만들었고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또 세계 최대의 해양플랜트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런데 최근에 구조조정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5년 동안 산업은행이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거 왜 매각이 안 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산업은행이 여러 차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위해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매수자금의 조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수익성이 그사이에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금융 중심 회사가 제조업인, 소위 조선산업인 대우조선을 경영 혹은 관리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채권은행이 있지만 은행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대우조선 사태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도 역시 세계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점에 일부 원인이 있고 또 대우조선 자체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지 못

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지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해당 기업들도 평소에 수익들을 장래를 위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반 선박을 수주하는 그런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선진화된 고품격의, 고가치의 선박을 위한 기술 혁신을 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예,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조선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이 호텔, 골프장, 건설, 풍력 이런 조선과 관련이 별로 없는 비조선 분야를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지도록 우리 감독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그 관리가 안 된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은 기업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또는 조언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일반 사기업,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이런 사태가 없지요? 이런 상황이 없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기업들도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 골프장, 건설회사, 풍력 이런 것을 회사가 갖고 있는 않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우 일부 경영진이 허황된 꿈을 꿔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전문 회사로 성장·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어서 대우조선해양 그룹을 만들거나 혹은 왕국을 만들기 위한 정말 허황된 꿈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종의 선진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 정부도 또 그다음에 일반채권단 혹은 금융권도 공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런 기득권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산업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거니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산업은행도 또 결국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고 저희들도 국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예, 그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유일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한창 구조조정 진행 중인데 우리 대형 조선소 위기 징후가 한 2014년 정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실질적인 것을 잘 보지 못했지만 아마 2015년 초에는 징후가 아주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대량 실업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해 오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를 신설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현재로서는 대우조선이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을 잃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상당히 마련을 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경상남도 발표했는데요, 올 1월에 실업자 수가 5만 2000, 3월에 6만 8000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통계상 잡히지 않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대량 실직이 발생했다 이런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전 대처가 가능한 특별고용지



원 업종 너무 늦게 추진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마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제도로써 저희가 이제라도 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상하기로는 대규모 고용 조정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 그것을 실사해서 또 한 번 더 지정 여부를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체들은 이미 많은 업체들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선제적 조치가 좀 더 빨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주 잔량도 있고 해서 그것이 아주 규모로 나타나는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까지 늦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본격화되면 저희가 다른 많은 수단까지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의원 동아일보 6월 30일 자 신문에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 고급인력들 채용·재교육만 하겠다…… 핀란드 정부가 노키아 몰락 후에 창업 프로그램 1000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슈퍼셀이라고 하는 게임 업체가 지난달 9조 8000억 정도에 매각되는 이런 엄청난 성과들을 거뒀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용한 것이 실직자 70% 가운데 재교육 희망하는 분야가 요리 분야다 이런 통계를 잡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리나라가 70%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례가…… 지금 제가 그것은 읽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그에 따라서 고용 문제가 가장 우리가, 의원님과 제가 서로 의논한 바와 같이 고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물론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있고 또 고용보험을 통한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을 합니다마는 길게 봐서 그것이 새로운 분야로 원활하게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 말뚝이 그런 예라고 하고 있고 또 조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사에도 아

마 나왔을 텐데 노키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좋은 대책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나왔다는 뜻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하여튼 요리사라는 것도 중요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의원 대체로 기술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기술이 익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 떠나 버리면 결국 많은 손실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간과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특히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현지를 가 보니 회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지난 30일 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발표했는데 조선 3사 빼 버렸습니다. 내용이 무엇이고 왜 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단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외한 이유는 아직은 수주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는 대우도 지금 실제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 활동 자체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중소 조선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미 벌써 법정관리 이런 게 들어간 데가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리고 고용 조정이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닦쳐 올 때에는 당연히 이것을 저희가 실사를 하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선제적인 발 빠른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아시다시피 조선 3사의 노동의 어려움 혹은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다시 또 협력업체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3만여 명이 되는 대우조선 일 그러면 협력업체들 근로자들이 굉장

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한표 의원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누락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연장급여가 저희가 하도록……

○김한표 의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이번에 빠져 버렸어요, 대책 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있습니다마는 이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신속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연장은 지금 3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직까지는 그 3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의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좀 더 살펴보고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발표 안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일차적으로는 당면한 추가경정예산, 추경에 포함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선업 3사나 또 중소 조선사나 또 많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실제로 거기의 요식업이나 이런 자영업들이 또 똑같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의원 좀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의원 울산 같은 경우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게 지역산업 SOC 사업에 추진되는데 고용 좀 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하기로 건설 허가가 의결됐고요. 지역 SOC가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그것도 다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SOC가 또 구조조정과 무관한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또 일괄해서 함부로 포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SOC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설게 이런 것을 아무리 앞당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다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조선 3사에 있는 근로자 분들이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공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데 조선소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 확장이라든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항공·나노 혹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추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다시 또 일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전혀 이런 데는 미동도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전직이 가능한 연관 SOC들은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한 가지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떠넘기기를 하는 그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부총리님, 좀 챙겨 보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 3부처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아마도 있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지금 정확히는 상황을 모릅시다마는 잘 조정을 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잘 되도록 한번 저희도 살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정부 산하기관의 문제점 몇 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당정협의회 이루어진 일 이후에, 그때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 당정협의회 때 말씀인가요?

○김한표 의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한표 의원 그런데 협력업체들 중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좌도 차압해 버리고 또 차량도 차압해 버리고 이러니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돈도 못 준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은 어찌 보면 공단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배려하도록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보건복지부하고 살펴서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한표 의원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 이후에 와서 보증이나 한번 끊어 가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건실한 기업마저도 금융권에서 전부 다 우산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 올 때 우산을 씌워 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원회도 그것에 대해서 아마 금융감독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금융기관들에게 건실한, 지금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게까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방사청에 관한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통영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 등 이런 우리 장비들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 인도가 늦었는데 방사청에서는 대우조선에게 도리어 909억 원 더 지체상금 물어라 이렇게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본 이유가 방산비리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전부 다 대우조선이라든지 개별 기업에 전가시켜서 부과하려는 것은 이걸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아마 방사청 입장이 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것도 정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지금 우리 조선사가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입니다, 대금 지급 방법이. 그러니까 스탠더드 방법은

20%, 20% 해서 죽 5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선수금 받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배 인도를 할 때 한꺼번에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한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해군 사업이 헤비테일 방식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증서를 끊어 가는데 그때 그때마다 기성고에 따라서 이 보증을 해제를 시켜 줘야 되는데 해군은 계속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배 만드는 조선소에서는 계속 신용도에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육군이나 공군, 해경 사업들은 다 공정에 따라서 기성을 인정해 주는데 유독 우리 해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불합리하는데 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게 군내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국방부나 방사청하고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해군만 말하자면 중간 중간 기성을 해결을 해주지 않고 마지막에만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군만 그런 관행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왜 해군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방부나 방사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언론하고 우리 정치권의 메인 이슈는 조선업 구조조정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큰 과제입니다.

○김한표 의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조선업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다 개선시켜야 합니다.

지금 대우조선 검찰 수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앞서 수색도 했고 전임 사장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분석회계라든지 비리라든지 일감 몰아주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언론과 함께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대우조선이 현재 건조

중인 외국에 있는 선박의 선주들이 보도가 잘못 돼 나가서 지금 대우조선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15일자 어느 신문에 외신 뉴스에서 그리스 마란(Maran)사를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들끓고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선사의 선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면서 좀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필요한 검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 조선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지금은 이런 많은 질타와 비난들이 쏟아지지만 결국 조선산업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려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조선소, 특히 빅3 어떻게 하실 그런 작정이십니까? 언론에서는 합병설 나돌고 있던데……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조선업계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커 왔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좀 중지를 모아서 조선업종들이 반드시 다시 희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한중일 삼국이 세계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성장잠재력이라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설비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도와준다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쟁력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또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최근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아마 공공부문 계획조선 수요가 385척이 있는데 이것을 조기 발주해

달라 이런 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표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공선에 대한 조기 발주 이것을 통해서 조선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경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 조선업이 왜 꼭 필요한지, 왜 우리가 조선업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같이 살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선업종을 계속 발전·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그 지역 경제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제도가 지자체로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이런 섬 도시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조선업 때문에 이것이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해양산업도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선박 환경규제로부터 새로운 연료를 이용한 친환경 선박까지 경쟁국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올해 IMO에 의해 선박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최근에 IMO가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박 환경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 조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역시 미래에 우리 조선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표 의원 친환경 선박 발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앞으로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파나마 새 운하가 개통되었는데 우리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파나마 운하의 확장으로 대형선의 통과가 가능하게 되어서 대형선박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형선 건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대형선 건조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기존에 4400TEU 이 규모가 한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1만 3000TEU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선박들의 주문이 꼭 필요하 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한표 의원** 북극항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의 조선산업과 연관시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로에 비해서 운항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 미래 대체 항로로서 유용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물동량 늘어나고 앞으로 이 시장도 크게 개척할 분야라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표 의원** 핵연료를 이용한 핵 추진 선박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들었습니다.

○**김한표 의원**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자력 추진 선박 필요성 또 다음, 원자력 추진 선박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원자력과 조선이 함께 만나면 새로운 신천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관심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 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의원** 우라늄과 토륨이 함께 섞여서 사용되어지는 원자력을 이용한 그런 추진 선박은 굉장히 안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토륨은 우라늄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토륨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의원** 이미 러시아는 한 50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핵잠수함이라든지 핵항공모함은 이미 벌써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을 쓰기 때문에 순간순간 올라와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쓰게 되면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되어서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식회계 비리로 얼룩진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세계 제1위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불법에 대한 대처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선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사도 필요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에, 확실한 부분에, 그리고 가급적 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조선해양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 속개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어닥친 샌더스 열풍, 그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를 당황하게 한 트럼프 열풍 그리고 최근의 브렉시트, 이 현상들은 모두 공통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잘살게 될 거라고 믿어 왔지만 결국 세계화된 경제는 심각한 양극화라는 불행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민심은 그러한 세계화된 경제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공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양극화,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를 공약하셨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국정과제 중 일부입니다. 대기업집단 지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고요. 이후에 2013년 7월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입법예고 후 상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아마 법무부가 여러 가지 학계나 관계 부처, 재계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언주 의원 2013년 8월 28일 재계 총수와의 오찬에서 의견 청취를 한 직후에 중단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중단된 이유가 재벌 총

수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 그런 의견을 누가 개진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자리에서 말한 것 때문에 상법 개정안 자체를 중단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 파급력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논의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때가 2013년 8월이었는데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그 직후에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다, 이렇게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경제민주화에 이 상법 개정안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다 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아직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이언주 의원 아니, 입법예고까지 했는데요. 입법예고하고 나서 의견 수렴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급력이 크니까 좀 문제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부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세계 경제 흐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이 상법 개정안 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입법예고까지 하셨으니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2015년 IMF에서 낸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받았습니

다.  
○**이언주 의원** 화면을 보시면 낙수효과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앞에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 왔던, 특히 정부가 믿어 왔던 낙수효과를 반박하는 보고서인데요. 소득불평등은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즉 노동유연화, 금융심화, 세계화 등에 의해서 가속되며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마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소득불평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만 가지고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소득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것이 성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소득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소득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니계수라든가 5분위 배율 같은 것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것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소득불평등을……

○**이언주 의원** 정부가 통계수치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 지수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종합적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지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성장이나 분배의 선순환은 그래도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제가 볼 때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특히 쉬운 해고, 파견 확대 이런 정책들은 저임금 노동은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서 한국 경제의 엔진을 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파견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파견법에서는 뿌리산업이나 이렇게 요건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파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시장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양대 지침 시행을 이미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해고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고의 절차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해고를 쉽게 했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경제 정책 기조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논법으로 계속해서 핑장히 위험하고 이제는 좀 전환해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주장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을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정말 후회하면서 ‘그때라도 그렇게 했을 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IMF 직후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오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언주 의원**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냐? 국민들의 주머니가 이렇게 차서 소비가 진작되어야 하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거비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주거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수도권의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이 일부 지역은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부 지역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한 73, 74%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90% 정도 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언주 의원 평균이 76.4% 아닙니까, 수도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전국으로 봐서 한 73%……

○이언주 의원 수도권, 수도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수도권이 아마 그것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이언주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언주 의원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19대 때도 제가 대정부질문하면서 이 부분 지적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문제가 또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월세 비중이 이미 절반에 가깝게 됐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전세는 옛날의 추억이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전세가 옛날의 추억이 돼 가고 있어서 기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은 기쁘다 슬프다의 그런 뜻이,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이언주 의원 아니, 예언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제도이고 이제 저금리 시대와 또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급히 상승하지 않는 한에서는 전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솔직히 피할 수 없

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가피한 것,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연착륙시키고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언주 의원 그리고 월세가격을 낮추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비율로 월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연착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언주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역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세의 주택—아파트가 주겠습니까—그것의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뉴스테이라든가 행복주택 같은 것이 될 것이고 또 공공임대주택도 나름대로 지금 그 숫자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또 정 급한 분들한테 대해서는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추세를 완전히 일거에 잠재운다든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언주 의원 제가 볼 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요 이 추세,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늦추기 위해서 정부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구조조정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에 내몰리고 이렇게 됐을 때 월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전환되게 되면 우리 이분들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업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원님이 말씀……

○이언주 의원 주거안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 일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거비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거기서 어떻게 이번 추경이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하신다 이랬는데 좀 더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뉴스테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뉴스테이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증금 사오억에 월세 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것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뉴스테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싼 데도 있고……

○이언주 의원 비슷비슷한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꼭 다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장에다 할 때는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테이를 보면 시장에서 월세 전환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된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가까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세 상품으로 많이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뉴스테이……

○이언주 의원 그런데 왜 월세 중심으로 내놓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로 그렇게 대규모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면 정부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민간시장에 맡겨 놓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뉴스테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민간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보통 이른바 대규모 기업형이다 하는 것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언주 의원 아니, 저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말씀하시는 것, 건설회사에 택지지원, 세제지원, 자금지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특혜까지 줘 가면서 비싼 월세 그리고 월세 전환을 가속시키는 것 이것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이것 그냥 민간 건설회사에 놔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특혜를 주냐고요.

특혜를 줄 때는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 전월세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세상품으로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썄요, 전세를 말씀을 하신다면 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

○이언주 의원 그러면 낮은 월세로 하시든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언주 의원 낮은 월세.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요. 100만 원씩 되는 월세를 어떻게 부담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보다 결코 높지는 않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겠지요. 왜냐하면 특혜를 주는데 주변 시세보다 안 싸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준 것은 주변 시세……

○이언주 의원 그러면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죄송한데요, 제가. 그대로 아니에요? 특혜를 주는데 그 특혜 주는 것만큼 조금 싸다 그러면 그대로 아니에요. 뭣 때문에 굳이 혜택 줘 가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기는 한

데요, 의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야말로 월세상한제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야말로 월세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주택이지요. 그리고 8년간 그 월세상한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모델로 정착이 되기 위한 지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월세상한제의 바로 그 모델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 어떤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복지를 늘려 줘서 국민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그러니까 국가가 해 줘도 되는데 국민들이 자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세수 확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세수 확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올해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세수가 많이 걷혔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세가 잘……

**○이언주 의원** 그런데 그걸로 불충분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어떻게 얼마,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 귀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지출을 그냥 급격하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일단 최대한도의 재정지출 확대를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세수 확충에 필요한 어떤 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들의 한계투자성향을 보면 지금

계속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0.295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낮아졌습니다. 투자도 부진하지요.

**○이언주 의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의 조세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낮다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니까 현행 세제하에서 법인세가 물론 투자 결정의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면 법인세의 효과가 그만큼 낮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 현재 투자가 부진한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데에서 큰 기업들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도 한계는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법인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세제지원제도가 또 따로 있어서 과연 그 세제지원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을 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일부 세제지원제도는 계속 좀 줄여 온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제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의 기업 조세지원 정책이 이 효과가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독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법인세를 줄여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그 남는 돈 가지고 꼭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법인세 문제를 기업의 투자하고 연결시켜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아주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법인세를 올리는 건 그만큼 또 투자를 더 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법인세는 아주 대표적으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가는 위험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언주 의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효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효세가 낮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실효세율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한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실제로 금액 규모로 보면 절대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또 많은 세금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규모는 대기업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율의 감은,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더 큰 것은 또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관련 지원세제를 그동안 많이 좀 정비를 해 왔고 최저한세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다 높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감면제도가 더 너무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은 같이 국회의 제의가 와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까지 실효세율을 조금 더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한번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R&D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R&D 투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것을 왜 국민혈세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근본적

으로 그 방향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많은 나라들이 하듯이 R&D의 소위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high return high risk)의 차원에서 본다면 고위험이란 측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혈세로 해 주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제 물론……

○이언주 의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는 많이 안 지고 혈세의 도움은 좀 받겠다 이런 것밖에 더 돼요? 옛날에는 뭐 그렇다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초기에……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초기에 그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없으면 그것은 그 투자 자체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익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법인세를 내겠지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히 과연 우리가 국가기술 기초기술이라 해서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R&D 또는 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것하고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같이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좀 차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일은 적어도 기업의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R&D를 하는 데는 정부의 도움이, 즉 국민의 혈세를 통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된다면 또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서민들이 더 힘들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특별히 대단할 것도,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돈 많이 번다고 그게 국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리스크 부담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공제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

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을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것은, 다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안 강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제도가 바뀌면 국회에서 결정을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되니까 당연히 국회에 와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쭙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전수당, 전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러셨지요.

○**이언주 의원** ‘고민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언주 의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참전 용사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을 대폭 확대 늘려서 우리 국가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보훈처와 또 관계 부처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기준까지를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들었고 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주 짙짙 하고 있어서요. 별로 대폭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특히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언주 의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게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부처도 그렇게 끌여가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초연금하고 보훈급여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면 차라리 보훈급여 안 드린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다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기초연금 수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의.....

○**이언주 의원** 그것은 이제 소득인정에 포함이 되니까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쉽게 보훈급여 외에 기초급여를, 연금을 더 드리는.....

○**이언주 의원** 아니,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대로 주고 이것은 그것대로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키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서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여러 소득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균형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투수당에 대해서도 좀 진전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같은 얘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전혀 진전이 없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여기 와 계신데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꺼져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불평등이 해소가 돼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뭔가 일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됐고 최근에 재검표까지 거쳤습니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정말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준 소중한 기회를 국민들을 위해 한번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정말 장사가 안 된다, 우리 아이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아이 장가 좀 가게 취직 좀 시켜 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중소기업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빈부격차와 노동양극화는 심화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그동안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수정법을 시행해 가지고 수십조 원을 들여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고 수많은 공기업과 산하단체들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역차별과 제약에 시달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순신대교 통행료, 무료입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1000원입니다. 인천에서는 다리 건너가는 데 6000원 냅니다. 지방에서는 터널 다니는 데 돈 안 내요. 수도권에서는 터널 다니는 데 다 돈 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는 100% 정부가 지원했어요. 부산항은 50% 지원했습니다. 인천항은 25%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약화시켜 놓으면 어떻게 상해나 도쿄, 홍콩, 싱가포르하고 경쟁합니까?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의견도 있고 중앙의 의견도 있고 또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적인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유지를 한다 이런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본방침입니다. 수도권에 투자를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섭 의원** 국토균형발전, 중요하지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청년실업률이 12%이고요. 젊은 이들이 일자리를 원합니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보니까요,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3위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 규제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나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또 장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과 또 국토의 균형발전 이 두 가치를 조화하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에서 지난 12월에 규제프리존 했는데 수도권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해외 유턴 지원법도 보면 지원을 하는데 수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 있는 국내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한 85%가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돌아오겠다 하는데 이게 지원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기업들이 못 들어와요. 대기업도 투자를 막아 놓으니까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려요?

지금 전경련 보고서를 보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27조 원 투자가 발생하고 26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 하겠다고 해 놓고 자유는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여간 최소한 상해 포동지구 수준의 자유는 경제자유구역에 줘야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넓진 않지만 그래도 또 균형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수도권의 규제프리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나름대로 산업기반이나 인력 또 여러 가지 인프라 등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프리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완책들에 관해서는 계속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좀 전에 부총리도 말씀하시기를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수도권……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수정법을 한 3년 내지 5년만 좀 유예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되고, 정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3년 해 보고 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규제해도

되는데 무조건 불가라고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불가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내지 5년만이라도 좀 적용을 유예해 보자?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라도 전면적인 규제를 푼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우려가 됩니다. 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전면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치유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면적·포괄적 규제 완화보다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유섭 의원 저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하향평준화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상향평준화하자 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일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성장할수록 지방 경제와 한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수도권의 정치적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국토개발 정책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만하고요.

중국 어선과 관련해서 총리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이 말이에요, 자칭 대국이라고 하면서 인접 국가의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000만 불에 중국에 어업권 팔아먹고 중국 어선은 비겁하게 우리 수역에 와서 고기를 잡다가 단속하면 북한으로 도망가는 행태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아요.

총리님, 중국에 대국이면 대국답게 행동하라고 좀 외교적으로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무총리 황교안 최근에 제가 중국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 최고 수반에게……

○정유섭 의원 항의 좀 하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유섭 의원 그 중국 어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게 강력한 단속이거든요. 이 단속의지가 가지고 해경이나 국민안전처에 지시 좀 해 주십

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게 사실 해상작전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하루에 400대의 불법 어선들이 우리 서해안으로 오고 NLL 밑으로 내려와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경 또 안전처 등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차제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필요하면 나포도 하고 또 필요하면 군경이 같이 가서 몰아내기도 하고 이런 대책을 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400대 가까이, 380여 대가 불법 조업 어선들이 와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주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얼마가 됐든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영해 침범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와 또 해경 또 군, 우리 모두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서해 5도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추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유섭 의원** 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수출전망이나 고용여건이 모두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대책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저희가 최근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단기 정책들이 많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있다, 그걸 위해서는 큰 방향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통 저희가 추경, 재정정보강 패키지 20조 원+a 이런 것하고 또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했고

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한 실업대책 또 지역대책, 이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가 완성연도인데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가 좀 불확실한, 불확실성을 어쨌든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선제적인 조치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물론 증가 속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제로 규모가 지금 매우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유섭 의원** 야당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난 국회 때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노동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세요? 그것 어떻게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정확히 '이렇게 하면 몇 개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동 4법의 경우는 정확히 그것이 파견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파견법에 의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생기느냐 하는 것이 좀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아마도 이것이 KDI의 용역 결과라고 하는데 최대 연간 69만 개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통과됐을 때 아마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한 예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예입니다.

○**정유섭 의원**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제는 어려운데 정부하고 국회가 따로 놀고 여야가 협력해서 민생을 챙기지 않아 가지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가 이런이런 것을 해

주면 좀 우리가 경제활성화되고 일자리 만들겠다, 또 예산은 이런 것을 누가 해 주면 좋겠다, 한번 전부 그냥…… 국회가 뭘 해 주면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뭐 뭉뚱그려서 저희가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에 저희가 제출을 했다가 자동폐기된 것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가 이른바 노동 4법이라고 하는 노동관계법령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예, 부총리 나오신 김에 제가 짧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굴포천이라고 있어요. 이게 인천 부평, 계양 거쳐서 부천, 김포, 서울 강서구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3개 시도에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 안 돼 가지고 인근의 수백만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동의하는데 기재부가 미온적인 입장이라는데, 돌아가셔서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국가하천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오셨나요?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년에 거의 5000억씩 흑자를 냅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에서 거둬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015년에 순이익이 7700여 억 원이 나서 국토부가 아니라 국고로 2700억 정도가 배당되었습니다.

○**정유섭 의원** 2700억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유섭 의원** 그리고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에 국가가 매년 민자투자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게 통행량이 매년 좀 늘어서 정부 부담액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영종대교에 709억 원 그리고 인천대교에 72억 원 해서 78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유섭 의원** 782억 원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유섭 의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천대교의 킬로미터당 통행료 단가가 일반 고속도로의 7배이고 공항고속도로는 5배입니다. 송도에서 다리 건너 한 번 갔다 오는 데 1만 3000원입니다. 시민들이 너무 과도한 부담을 해요. 그런데 공항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700억 흑자를 내고 정부는 2700억씩 가져가는데 주민들은 이것 1만 3000원씩 내고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의 핵심기능은 공항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말씀하신 2개의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책임은 법적으로 없고, 한다면 재정에서 했어야 되지만 재정여건상 민자를 유치해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할 경우에 다른 유사한 민자사업도 보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민자법인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전 세계에 다녀 봤습니다마는 공항고속도로 이렇게 비싸게 받는 데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유료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물론 유료도로는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거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목적 자체가 공항에 가기 위한 거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항 가기 위해서 건설했는데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항공사는 수익 나는 것만 다 하고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 안 하고 7700억씩 갖고 주민들은 계속



부담하라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항고속도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민자사업자 차입금리가 13.9%예요, 최대. 그리고 주 채권자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민자사업자는 계속 배불리고 국토부는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고 주민들은 계속 통행료를 내고 제3연륙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제3연륙교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이 돈 낸 게 5000억 지금 LH가 갖고 있잖아요. 돈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짓잖아요.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다리는 못 짓게 하고 돈은 계속 내게 하고 이것 진짜 모순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의원님이 몇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조금 정리를 하면,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여전히 높다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공항공사가 수익이 나면 그것으로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 부채 상환에도 써야 되고, 그것보다 잘 아시는 대로 3단계 그리고 4단계 공항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수입이 주로 그런 데에 충당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의 지금 재정구조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무투자자가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투자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익률을 낮추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륙교의 문제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원래 인천공항공사의 기본계획에는 제3연륙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 자체가 계획량의 25, 27%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연륙교를 짓게 되면 나머지 민자로 유치한 두 도로의 통행량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실보전을 해야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제3연륙교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섭 의원** 그 통행량이 27%라는 얘기는 처음에 추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처음에 추정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공항철도는 리파이낸싱 해 가지고 정부 부담 얼마 줄였습니까, 총괄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인천공항철도의 경

우는 코레일이 소유자였고 코레일이 공항철도 자체를 매각하면서 사업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RG를 폐지하고 대신에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 리파이낸싱의 경우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과의, 주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 작년에 이러한 리파이낸싱을 해서 통행료를 1000원을 낮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교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제3연륙교 이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주민들이 5000억을 내놨는데 이거를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자꾸 잡아 놓는 게 언제까지…… 10년 지났거든요,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이 문제 하여튼 푸는 순서에 대해서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족하지 신공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예산 낭비라고 저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지역 이기주의하고 정치논리로 공항·항만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남길 뻔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관료들한테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포퓰리스트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관료들은 중심을 잡아 주어야지요. 저는 관료들이 2011년부터 이거 밀양이나 가덕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말하기 어려우니까 제3자인 파리공항엔지니어링,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인천공항 할 때도 환경론자들 반대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고속철도 할 때도, 천성산 돌파할 때 지울 스님하고 환경론자들이 반대했지만 국토부 공무원들,

관료들, 장관을 위시해서 좀 결기 있게 행동을 했어요. 왜, 동남권 신공항은 이걸 뒤 PK·TK,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겁니까? 여기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려웠는지 그거 말씀 좀 할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간의 사정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려운 의사결정이 해당 5개 지자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시행된 제3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말이 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절차를 밟아서 가장 좋은 공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관료들이 좀 소신 있고 당당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연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말피의 눈물을 말씀하셨어요. 그 해당 조선소가 코쿰 조선소입니다. 코쿰 조선소, 스웨덴 정부가 수조 원 자금 지원했는데도 경쟁력을 상실해 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은 1달러에 우리 현대중공업에 팔았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말피는 다른 지식기반도시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들었습니다.

○**정유섭 의원** 우리도 경쟁력 없는 과잉설비가 있다든지 하면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경영진도 부실하고 감독도 안 되는 곳에 언제까지 수십조원의 국민 부담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을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과잉설비 축소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제대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 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구노력, 또 이해관계인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그 지역경제라든가 혹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 또 고용 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에는 작년 10월에 기업이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또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약 한 4조 원의 부족 자금을 지원을 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추진한 것입니다.

○**정유섭 의원** 제가 MB 정부 시절에 지경부장관 하신 분이 당시에 대우조선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왜 대우조선 매각 결정을 못했을까 봤더니만, 산업은행이 비협조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환은행 매각할 때 그것 때문에 변양호 씨가 구속되고 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매각하고 나면 헐값 매각했다, 특혜 매각했다…… 그때 한화한테 매각하려고 그러다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런 차후의 책임 문제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과감하게 좀 결단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정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은 사후적인 책임 문제와 함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그런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데에 따른 면책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처리를 함에 따르는 근거의 마련,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을 해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유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선주협회 회장이 해운업 어렵다고 지금 금융권이 신규 거래 막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적선사 외면하고 대형 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국적선사 이용하지 않고 외국선사 이용

하는 대형 화주들 명단 좀 발표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특히 이 현대와 한진 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융 축소라든지 RG 발급을 꺼린다는가 하는 금융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량·대형 화주들조차도 구조조정을 약간 우려를 해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에 약간은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운송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질서가 매우 경쟁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단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정기 별크화물의 경우에는 대량 화물 화주들, 특히 철·발전·가스공사 등 관계 대기업들이 우리 선사들과 선·화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량 운송계약의 경우에 80~90%가량 우리 국적선사가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량·대형 화주들의 자회사들 그리고 이를 포함한 그런 복합운송업체들과 우리 선사간에 선·화주 협의체가 지금 구성 논의 중에 있어서 조금 더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유섭 의원** 조선소는 지금 수주 실적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해운회사는 지금 경쟁력이 있는 선박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이 조선·해운 협력 방안 제안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실 해양수산부와 정부 그리고 특히 산업부 간에 조선·해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긴밀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선사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발주 대기 중인 관공선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여객선 등, 또 각 부처에서도 관공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기 발주하고 또 선박 현대화와 맞물려서 지금 금년 중에 바로 발주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대형 선사의 경우에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약 12억 불을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바 있고, 이 규모나…… 당초에는 1만 3000TEU짜리 10척 정도를 발주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탄력적으로 규모나 선종들을 대응해서 조선과 해운 간에 상생하는 방안이 지금 긴밀히 논의되고 있고 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유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민생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통 크게 생각하고 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만은 인기에 영합해서 포퓰리스트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문제만은 지역과정과의 이익을 좇으면 안 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 달성과 선거에 이기기 위한 약속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를 해 줘야 합니다. 재벌들이나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서로 이끌고 존중해 줍시다.

오늘 질의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구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해수부장관 먼저 나오십시오.

오늘로써 세월호 사건 발생 811일째입니다.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윤호중 의원** 그런데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밖에 활동시한을 남겨 놓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활동시한을 법 시행일인 작년 1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6월 30일 종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2월 7일까지 활동

이, 조사기간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기본적으로 한시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시법의 경우에 법정 기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6조의 5항과 7조, 그리고 부칙 1조와 3조에 의하면 특위의 활동 개시일과 위원의 임기일 또 구성일, 특별법 시행일이 모두 작년 1월 1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8월에 예산이 배정된,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하고 배정된 날이 8월 7일과 14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특조위의 활동기간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의원** 정부가 예산을 늦게 배정함으로써 사실상 ‘조사기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가 이제 인양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있을 예정인데 선체조사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실한 조사활동으로 그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 정부를 반드시 질타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의원님, 특별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인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인양이 결정되고 이제 인양이 임박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양 후에 선체조사팀을 구성해서 확실하게, 그간에 논의됐던 조타기의 문제랄지 기관실의 문제랄지 선체 외관의 문제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농해수위원회에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였다는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선체조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분명합니다.

○**윤호중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올해 6월은 21세기 민주주의 역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두 가지 일이 있었던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과 영국의 브

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이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 된 유럽을 꿈꾸며 시민이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그에 기반한 영구평화를 부르짖었던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이상이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주의의 부활, 직접민주주의 배신,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거대경제세력의 탐욕과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독선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진보적 석학뿐만 아니라 냉전 종식과 더불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영구 승리를 선언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조차 중산층의 위기, 무능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쇠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주장,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총리, 극단적 격차 사회와 양극화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두 위협하고 있다는 세계 석학들의 지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격차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의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의원** 이번 총선 결과 나타난 민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정치권 다 같이 잘하라고 하는 그런 축구의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의원** 우리 국민은 지난 8년의 보수정권을 선택하면서 MB 대통령을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대로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진의 고도성장 경험,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은 오히려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불행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극복하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길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의원** 제가 총리께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이번 총선의 민의를 겸허하게 살피고 그것을 경제 정책에, 아니 모든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채 주도 성장전략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그것이 부채 주도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채만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략은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자, 현재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 지금 12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구당 빚 규모가 6100만 원이 넘습니다. 국가채무도 590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이 계속 쌓여 가고 있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계와 국가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쌓여 있는 대기업의 곳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가부채라든가 가계부채는 기업의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저희로서도,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것이 어떤 회계상의 기준에 의한 회계

개념이지 그것이 마치 어떤 무슨 금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투자가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부진하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 부진의 문제는 국가부채나 가계부채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총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줄푸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구조개혁, 노동개혁 등 정책 역시 수출 대기업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세제지원 등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풀어 주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 모든 투자 유치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낙수효과가 없는 이런 경제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주도의 경제전략, 이제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투자가 부진한 것은 정부로서도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왜 부진하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은,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투자의 부진을 끌어왔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출 대기업에게만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가계를 위한, 그러니까 여러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특정 대기업들을 위한 그런 지원만이 우리 경제 정책 핵심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의원**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의 경제·정치 지도자들은 소득을 늘려서,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가르트 IMF 총재도 소득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는 게 우선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1만 800원으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보수 정치인 아닙니까? 경기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 기업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용적 성장전략으로 정부의 정책이 일대 전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결코 우리 박근혜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 있고, 뭐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기에 나온 최저임금의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3년간 최저임금이 아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라든가에 대한 그 지원 대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저희도 그것은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에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튼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호중 의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 비중을 높여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나라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암만 해도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나라들은 내수가……

○윤호중 의원 내수 비중이 80% 안팎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큼니다. 우리보다……

○윤호중 의원 우리는 50% 미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좀 더 어느 정도 균형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윤호중 의원 수출부문의 지원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위축 때문이라고 다른 의원님께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수요 위축 때문에 수출경제 부문

에 아무리 지원을 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수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수투자도 늘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수의 유효수요를 넓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득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호중 의원 서별관회의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윤호중 의원 서별관회의의 공식 명칭이 뭐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공식 명칭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윤호중 의원 명칭도 없으면 유령 회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별관회의라는 것이 그냥 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련 부처 장관이나 혹은 뭐 어떤 때는 한은 총재도 오시고 하는 그런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주제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서별관회의란 이름이 온 것은 그 장소가 청와대 서별관이 되다 보니 ‘서별관회의’란 명칭이 붙었는데 저희가 뭐 그것의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협의체 회의가 서별관 아닌 데서도 이루어진 적도 있긴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제가 서별관회의라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음습한 안가에서 회의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 정책조정회의’, 이것 서별관회의의 공식 명칭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닙니다. 거시경제 정책 조정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안건이 있으면 또 다른 안건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유령 회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주요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차관급 이상의 회의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회의록 작성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회의록 작성 안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것은 기본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회의록은 또 별도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

○윤호중 의원 회의록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없습니다.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그러니까 유령 회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썄, 그것을 ‘그러니까 유령 회의’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신다면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실체는 분명히 있고, 다만 저희가 이것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 서별관회의에서 작년 10월에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의논한……

(박주선 부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호중 의원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받아서 그것을 국민께 발표를 해 드린 겁니다. 그 결정은 오히려 발표한 그 시점이, 그 이사회가 오히려 더 맞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 지난달 6일에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편드를 통한 발권력 동원에 관해서 논의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논의는 했습니다.

○윤호중 의원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정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달에 열렸으니까 이미 발표된 것은 6월 달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나 그것은……

○윤호중 의원 그러면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금통위도 아니고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윤호중 의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왜 차관급 이상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회의록 하나 없이 밀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이 밀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협의체라는 것이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회의록 문제는 앞으로 글썄요, 그것을 우리가 서별관에서 이와 같은 회의를 계속할지 다른 장소에서 협의를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굳이 서별관이라는 장소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의록 문제는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윤호중 의원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정부가 때만 되면 ‘지니계수가 다소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피케티 교수가 OECD에 제출한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 여기에는 상위 10% 소득분위가 45%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니계수를 계산한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상위소득 10%의 소득 점유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호중 의원 부총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재부 확대회의에서 ‘피케티의 자료는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케티……

○윤호중 의원 OECD 공식 보고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피케티 교수 자신이 한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 의견을 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피케티의 그것을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윤호중 의원 자, 이 보고서 내용이 PPT에 올라올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22%라고 한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5%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OECD 보고서는 피케티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세청의 납세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호중 의원 그런데 물론 피케티의 WID 수치는 실제로 45% 좀 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납세를 하지 않는 국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납세자를 고려한다면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서 10% 상위 소득자들이 소득의 38%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지니계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불평등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작성하신 자료도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

○윤호중 의원 이미 19대 때부터 지적을 했고 기재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알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마는 지니계수 하나만 가지고 또는 저희가 통계청이 계산한 소득 5분위 배율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총체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딱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지표마다 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니계수가,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지니계수 만이라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소득분배가 개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을 지니계수가 이러니까 우리는 다 잘 됐으니까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나아졌다라는 말로 위안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소득불평등도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45%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서별관회의가 다른 형태로 지속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께 지금까지 해 왔던 줄푸세 정책 이것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만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서 포용적 성장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건의하는, 그런 결 결정하는 회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들겠습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항상 소득불평등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한번 장관들이나 관계기관이 모여서 의논을 해 보는 게, 협의를 해라 하는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다만 저희가 소득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역시 일자리에 있다는 그런 문제인 식 방향성하에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호중 의원 일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이전에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임금이 어디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아마 최저임금에……

○윤호중 의원 OECD 기준으로 24%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2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윤호중 의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OECD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선거 때만 되면 여당·야당 다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수용하지 않습



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의 공약이 2020년까지 8000원대를 달성하겠다, 아마 8000원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7~8%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임금상승률은 지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상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의원** 참고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에 대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내놓은 노동 개혁, 소위 파견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파견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는 정책보다는 정규직으로 보다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파견법이 비정규직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규직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고 그것을 또 기업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로서 그 노력을 다 하겠는데요.

그런데 또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렇게 차이도 많고 또 상당한 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것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의원** 경직성 이야기를 하면서 하향평준화를 자꾸 주장을 합니다. 하향평준화하면 이익을 보는 것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상향평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호중 의원** 또 하나 덧붙여서 소득을 늘리는,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

다.

○**윤호중 의원** 그런데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노동생산성 격차는 3배나 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글썄요, 중소기업의 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로, 사실은 이 문제도 역시 다시 또 고용의 경직성 문제로 가는데 대기업의 일부 노조는 상당히 어떠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윤호중 의원** 부총리,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생산이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임금을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계에까지 몰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노동의 경직성 문제로 이야기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동의 경직성도 한 이유라는 것이고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은 법으로 지금 금지하도록 이렇게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미리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계약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한 경쟁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정한 경제가 되어야 소득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지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빛과 세금만 늘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 무너진 민생경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 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성장을 하락과 가계 부채, 국가 부채의 급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뿐이었습니다. 가계는 휘청거리고 국민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큼니다.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宗燮 의원**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님과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차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회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국가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참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 10여 년 정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지난 6월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대구·경북 민심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왜 정부 발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절망하고 그저께 국토부 2차관도 내려 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를 하고 있는지 또 왜 납득을 못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역분들과는 전에 제가 근무를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 경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검증은 해 봐야 되겠다, 그리

고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 또 신공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우려와 의견 제시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부가 차관을 보내서 민심을 다독거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 정부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우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점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출발한 것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연 김해공항의 확장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세 번째는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언급된 대구공항 존치의 문제 또 K2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그야말로 대구·경북 주민들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야말로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번 정부 발표안이 정말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 1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된 이후에 2007년 11월 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 또 2009년 부산발전연구원의 동북아 제2 허브공항 입지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모두 비용 대비 효율성 부족,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2월에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에서도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이 되었고 그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부

적합하기 때문에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국무총리께서도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논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최종 결과가 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려 요소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논쟁이 종식되지 않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겠다고 해서 5개 시·도지사들께서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을 수용하자, 그리고 또 그 결론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으로 논쟁도 하지 말자 그런 좋은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논의가 계속될 것인데 이렇게 큰 틀의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합의대로 명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ADPi에 용역을 의뢰했고 또 그 용역 의뢰할 때도 지자체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서 김해 신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鄭宗燮 의원** 제가 듣기로는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대전제가 이게 가덕도냐 아니면 밀양이나 하는 전제하에서 둘 중에 어디로 결정이 나든지간에 거기에서는 승복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은 발표한 것과 달리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그 전제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무총리 황교안** 5개 시·도지사의 합의가 어느 특정 두 항을 염두에 두고 제한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용역 전달기관에서도 현지 설명회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에 이 내용을 분명

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해 신공항도 검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 주었고, 그 해당 지자체의 건설국장들이 참석해서 실제로 질문도 했고 그런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수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런 공항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알기로는 모두 35개의 지역을, 후보지역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8개로 줄이고 또 5개로 줄이고 3개로 줄여서 최종 후보 세 지역을 토대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러면 이번의 정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번에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V자형 활주로 건설 방안과 유사한 안이 이미 한차례 검토가 되어서 채택된 바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참 절묘한 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장관께서……

○**국무총리 황교안** 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래서 사실 보면 정말 외국 용역기관이 1년 만에 찾아 낸 이 묘수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할 정도냐, 아니면 우리 정부와 또 연구기관이 10년 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은 맞지 않나 이렇게 한 결론이,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로 갔을 때 정말 1년 만에 외국 발주 회사가 한 것이 그야말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너무 폄하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2012년도에 결정을 할 때와 금년도에 결정을 하는 사이에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항공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폭 확장이 돼서 항공수요가 2012년도에 평가할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신공항의 확장 필요성이 더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새 활주로를 만드는 이런 문제도 과거

에는 그게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factor)들을 집어넣어서 검토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기관이기는 하지만 외국기관에다 맡기는 것이 공정하겠나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서로 합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이 그냥 파리에 앉아 가지고 이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여 차례 여기를 방문을 해서 아주 밀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 신공항 확장을 하기로 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새로운 검토를 해서 이런 검증 결과를,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鄭宗燮 의원** 그간에 있었던 그런 변경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경된 요소를 밀양을 신공항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겠지만 안전 문제 그리고 밀양의 경우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제기됐고 또 지금 가덕도나 김해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했고, 또 더 큰 문제는 비용 문제가 있지요. 어떤 특정지역은 완전히 여러 산을 깎아야 되고 또 어디는 바다를 매립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국토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감사합니다.

○**鄭宗燮 의원** 오늘 그런데 좀 심각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관련 용역계약서라는 것의 제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ADPi는 최종보고서 수정본을 올해 6월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거기 색깔 칠해 놓은 것 보시면? 그런데 이미 6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러면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의 계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ADPi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를 현재 제출을 못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러면 용역계약서를 6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받으실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알기로 원래 과업지시서에 용역계약이 끝나기 전에 연구결과를 요약한 최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6월 20일에 ADPi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를 하고 확인해서 21일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최종보고서는 사실 지난번에 6월 20일에 발표한 발표문에 용역의 핵심 내용인 입지평가 결과가 담겨 있고 최종보고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저희는 7월 중순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7월 중순에 받으시면 저번에 발표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에 혹시라도 마지막 최종보고서에는 변경될 요소가 혹시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20일에 와서 결과를 보고했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21일에 발표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핵심이 영남권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지평가가 최종보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여기에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宗燮 의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받으시면 즉시 국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렇다면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ADPi 발표문에만 의존해 가지고 김해공항 확장, 동시에 중요한 것은 대구공항을 준치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K2 군공항 이전 문제 또 대구공항 준치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대구·경북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차관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최종보고서는 받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에 관해서는 최종 발표문을 토대로 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K2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대구공항 존치에 관한 것은 또 별도의 이슈인데 특히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가 책임지고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국방부와 또 대구시와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혹시 그간에 국방부하고 어떤 논의가 좀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는 직접 논의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러면 대구공항 존치에 대해서는 혹시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대구공항 존치에 대해서는 존치계획을 발표를 했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 수요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대구공항이 그야말로 국내공항으로만 머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국내외 수요를 보고 또 대구·경북 지역의 그야말로 세계마켓을 향한 그런 역할을 하려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남권 공항이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국제선 수요…… 아무래도 국제노선에 대한 수요는 신공항의 영향을 감안해서 대구공항의 어떤 교통수요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鄭宗燮 의원** 차관님께서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감사합니다.

○**鄭宗燮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ADPi는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면서 대구공항이 계속 운영된다라고 전제를 했는데요. 총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K2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鄭宗燮 의원** 그래서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안

이 대구공항을 존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제되면 사실상 K2 군공항 이전이 과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게 될까, 이게 지금 대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민들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딱 되니까 K2 군공항 이전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K2 공항에 관해서는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처리 의견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이 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사실은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구시민, 경북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아까 국토부차관께서도 이 문제는 또 국방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어느 부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 또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 국무총리실이 참여를 하고 우리 대구지역 국회의원하고 또 대구시장이 모여서 그야말로 K2 군공항 이전과 또 대구공항 존치 대책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鄭宗燮 의원** 예, 사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하시고 총리님께서 중심이 되셔 가지고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셔야 우리 대구시민들도 납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제가 이제껏 드린 질문에 구체적인 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구·경북 주민들을 납득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국토부차관이나 장관이 지금 대구에 가서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

보셔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도 사실은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라도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지고 대구시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또 지자체장과 대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鄭宗燮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문제인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의 민주적 운영……

○鄭宗燮 의원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주 넓게 보면 모든 불평등에 관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분배 이런 문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최근에 경제민주화 논의는 상당히 기업생태계에서의 평등성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 관계라든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구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경제민주화의 주제로 약간 좁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宗燮 의원 그런 점도 한 측면이지만 사실은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그 문제만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포괄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게 크게 보면 경제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소득의 불평등도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되어 있는 고용의 양극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 거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鄭宗燮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상당히 포괄적인 만큼 답도 참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문 부문별로 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소득분배 문제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 대책이 중심이 되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좁은 의미의 재벌 대책이라든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는 그것대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구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시장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암만해도 노동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추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미 성공적인 예로서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듭니다. 그와 같은 노동 개혁의 큰 방향이 우선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작게는 저희가 추진하는 노동 4법의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鄭宗燮 의원 중·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 경제구조 전체를, 한국 경제구조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검토를 좀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그것을 위한 큰 방향이라는 것은 소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4대 개혁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지금 신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위한 산업 개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보기에 큰 구조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구조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저희가 경제체질의 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별·부문별의 개혁 이런 것들로 결국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물론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앞

으로 점점 호전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 시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호전이 될 것인지 다 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鄭宗燮 의원 소득불평등과 관련해서 고용의 양극화 문제도 이제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데 이 진입 장벽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 나갈 것 인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구체 적으로 참 작습니다마는 노동 4법 같은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위 독일의 하 르츠 개혁 같은 것을 한걸음에 할 수 있다고 그 러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인데 한걸음 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해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의 정규 직·비정규직 간의 노동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표현을 또 쓰게 됩니 다만 결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개혁,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宗燮 의원 그래서 경제민주화 문제를 너무 과장하는 것도 안 좋지만 사실 이 문제는 경제구 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 상황에 매일 같이 새로 터져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 응하시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한 국 경제의 성격 자체를 고쳐 나가는 노력은 정부 에서도 사실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옳은 말 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큰 방향은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것에 상 응하는 비슷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것 은 역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중의 일부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 고 또 다른 긴 호흡의 정책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기 대책으로 될 일 은 아니라고 봅니다.

○鄭宗燮 의원 예.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 를 하셨는데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요소가 또 발 생했기 때문에 이것과 결합해서 경제민주화를 동

시에 더 복잡한 그림 속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을 해도 됩니까?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들이 하 여튼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장·단기인데, 단기적으로는 바로 그냥 발등의 불 같은 일은 역시 저희가 조금 예 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기 경제 문제로서의 큰 파급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다 했고 지금 금 융시장이라든가 세계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촉발이 정 치 문제, 사회 문제로부터 촉발이 된 것이고 그 것이 경제 문제는 길게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는 참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구조 문제, 경제민주화라는 문제에 연결이 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 을 하셨지만 사회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적 인 구조에 대한 상당히 막연한 불만 같은 것이 이번 브렉시트라는 투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있 다고 봅니다. 아까 이언주 의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들을 포 함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브렉시트라 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지 모르지 만 그것이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형태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의원 금융시장의 문제로서만 좁혀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는 큰 그림에서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鄭宗燮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되어 오던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과 대책이 없이 외국 용역기관이 정부 정책을 뒤집

는 듯한 발언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모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K2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대구공항의 존치 운영에 대해서도 그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좁은 국토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국민들이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벌이는 이러한 소모전을 이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정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 우리나라에 폐지 좁는 노인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해서 큰 리어카로 두 번 나르면 하루에 1만 2000 원, 할머니들은 유모차로 몇 번 나르면 이삼천 원 법니다.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그중에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지 좁는 노인들을 상대로 200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우리나라의 거대 제지 업체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185원 하던 것이 한 번은 67원까지 떨어졌고, 두 번째는 174원 하던 것이 6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도 보호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에 의해서 이 어르신들이 받은 피해, 받은 손해 누가 배상,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부가 챙겨 드려야 되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답을 해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의 오늘 첫 번째 질의의 주제는 불평등과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두 번의 담합의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부가 일정 정도 있다고 한다면 담합을 한 제지업체는 70을 가져가다 95를 가져간 겁니다. 중간에 있는 고물상들은 킬로

그램당 100원씩만 받기 때문에 전혀 수입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고물상들 수입은 그대로인 체 제지업체는 담합을 해서 팔 때 25%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한 합당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 구제 강화와 위법행위 억제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우리 민법상의 기본 원칙이 또 있습니다. 민법상은, 우리 민법은 실손해 배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또 남소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의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는 특정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건의를 하신 것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한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래서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편취에 대해서 또 금융정보 보호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두 네 가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래서 기존의 민법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논거 자체가 이미 허물어진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은 여전히 민법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예외가 많이 생기면 체계가 허물어진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에 걸쳐서 4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민병두 의원** 담합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죄악입니다.

○민병두 의원 납품단가 후려치기보다 더 큰 죄가 담합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행위들이 다 적절치 않은 부적절한 행위들입니다.

○민병두 의원 담합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담합이 적발돼서 얻는 손실이 수십 배 더 크다는 교훈이 있어야지만 담합은 근절되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담합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단속도 하고 제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이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또 독극물이랄지 혹은 또 소비자에 대한 사기, 중대한 과실,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역시 여전히 포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미국은 일반화돼 있지요. 폭스바겐 미국의 피해 관련해서 미국이 어느 규모로 합의를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우리와 미국이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소비자 개인당 700만 원, 국가는 17조 그래서 전기차 보급하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의했습니다. 한국에 같은 차종 12만 대 팔렸습니다. 한국은 AS해 주는 걸로 끝납니다.

어느 나라 소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피해를 보상받는데 대한민국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범무법인을 통해서 미국에 가서 그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이것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에게서 대륙법계에 따른 기본 법제가 있고 또 미국은 영미법계에 따른 법제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저희도 그런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중국이나 타이완은 영미법을 따르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영미가 다르고 대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총리, 과거의 법전을 벗어던지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를 벗어던지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약자를 얘기하겠습니다. 금융 추방자입니다.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한 몇명 정도, 규모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한 20만 명 채 안 되고 한 이삼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찜질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깁니다. 왜? 학교에 가는 순간 소재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가정이 해체되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면 충분히 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징벌을 받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병두 의원 저는 그 사람들을 양지에 나오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추방자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소비도 증가시키고 사회적 통합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오히려 이 땅의 사회적 약자한테 패자부활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경제민주화가 별개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100만 명 되는 노인들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방패와 창을 주고 10년간 1000만 원 이하의 부채 때문에 악성 추심에 시달렸던 사회적 패자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회적 약자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한 정부의 또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스템하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 개선을 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 의원 강자의 패배와 강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적이고 사회적 약자의

패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용으로 임하는 사회, 과연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좋다, 한 10년 정도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가족 해체까지 당했다고 한다면 사회공헌기금의 일부를 내서 1년에 한 5000억씩만 털어 줘도 10년이면 다 털겠다,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총리의 정말 전향적인 사고,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총선 민의에 의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각 분야의 제1호 공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다음에 부채의 탕감,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입니다.

지난해 연말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표한 바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1·2차와 무엇이 다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1·2차는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검토하지 못했던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출산의 개선을 위한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제3차 저출산 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1·2차와 3차의 차이점은 3차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존립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정부질문하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 국가가 소멸한다.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원의 과감한 징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도, 삼성도 핸드폰이 안 팔리면, 현대도 자동차가 안 팔리면,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려서 소비자가 없다면 그들도 어려운데…… 출산율 2.0이 될 때까지 국가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한 50%의 국민이 세금을 안 내는데 그들도 한 달에 한 1만 원씩은 내 보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할 때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3차 저출산 대책에서는 저의 인식을 부분이나마 받아들여서 국가 존립의 문제로 봤고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보급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대대적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역대 정부보다 많은 그런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또 한편에서 우리의 지금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자가 보유율이 한 40%, 50% 됩니다. 자가 보유율이 50~60%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대충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면 주택수요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살 만한 사람은 다 산 것이지요. 전월세 사람 중에 상위 30%만 주택담보랄지 여러 가지 형식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위 20~30%는 주택을 구입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선진국들은 하위 20%한테 양질의 우량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도 그런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변화하겠지요?

우선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전반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집 갖지 못한 상위 30%의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겠지요? 가격이 하향화되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 대량 공급되면 경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이 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지금까지 우리는 포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갖다가 건축 자본에, 건설 자본에, 건설 산업에 포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택매매시장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봤는데 지금은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이 훨씬 큼니다. 이 임대

시장의 안정화 이것은 전월세 가격의 상한제……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입니다. 오늘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물량의 공급 문제입니다.

저는 대대적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소멸방지세, 사회적 목적세를 도입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안을 들어 봤느냐 물으셨습니까?

○**민병두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국민연금은 원래 공공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채권에도 한 57%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서 한 3~4%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운용을, 이것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 해에 한 20만 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되고 임대시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연금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한 그런 재원입니다. 그 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의 문제는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사업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가 동의할 문제가 아니라 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수익

성 또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하고 주거난민, 주거복지 문제는 복지부장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총리, 그분들한테 넘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출산 극복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정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이고, 지난 1차·2차 종합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계속 출산율이 낮아져 가고 있던 것이 지금 멈추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안,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큰 절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출산율 1.5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행복주택을 13만 호씩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2020년까지는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취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병두 의원** 346개 공공기관의 1분기 신규 채용인원을 보면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서 26.3%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이 늘었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금년도 신규채용 목표가 4000명이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실제로 채용하려는 목표가 1만 90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청년의무고용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정원의 3%,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이

34세 이하 청년 일자리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올해 연말 일몰, 끝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연장하실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관계 부처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3%가 아니라 5%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고용의 기회 균등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부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일반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공기관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기업의 근로조건, 근로여건 등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가 정부가 지난번에 5년이 정말 골든타임이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한 정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나 심해서 이 한 타임, 한 5년 10년을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재앙의 시기를 일생 동안 경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주 심각한 시기에는 3, 4년 동안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대책을 도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의 취지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는 총선 민의에 의해서 확인된 우리 당의 분야별 네 가지 공약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낡은 경제학 교과서를 벗어던져 버리십시오. 법학 사전을 던지십시오.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를 읽어 보십시오.

구조조정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의 적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분식회계는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민병두 의원 미국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를 한 엔론 책임자를 징역 25년에 처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양형이 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분식회계에 공조한 회계법인의 문을 닫게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미국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병두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그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우리 검찰 수사 하고 있지요, 대우조선 분식회계?

○국무총리 황교안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분식이 이 땅의 자본주의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특단의 어떤 각오가 서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그에 상응한 징벌을 가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회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민병두 의원 대우조선이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한 데는 정치적 배후가 있다, 든든한 백이 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낙하산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정치적 백에 의해서 온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떤 보호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사에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증거들을 샅샅이 찾기 위한 노력들을 검찰이 원칙에 따라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대우조선해양 등에 정경유착의 비리나 그 단초가 나온다면 외면하거나 비껴 서 있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이 비리가 있는데 비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 수사를 하고, 수사에 상응한 결과로 응징으로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대우조선해양의 배후에는 이명박 정권과 그 실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비껴 서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단초가 발견된다면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제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원칙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 부산 롯데월드 부지용도 변경, 맥주사업 진출, 여기도 전 정권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전 정권과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빗겨 서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 결과 나온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구조조정의 적들’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조조정의……

○**민병두 의원** 적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얘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민병두 의원** 외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이들이 그들을 눈감아 줬다, 아니다 그들은 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첫째지요. 다음 두 번째, 국책은행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국책은행 개혁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된 국책은행 필요 없지요. 차라리 민영화하든지 아니면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책은행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미진한 점이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 아직 우리는 구조조정을, 컨트롤 타워를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서별관회의, 이게 최경환 경제부

총리 개인의 친목계도 아니고, 경제교사들의 모임도 아닌데 앞으로 법률적으로 정비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라든지 또 그동안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IMF 때 우리 국민들은 기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왜? 대기업이 나와 내 자식의 일자리를 보장해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내 아들의 직장을 빼앗아 가고 골목시장이 침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처럼 부실화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투명하게 분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손을 벌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것을 투명하게 다시 살려서 대기업을 갖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한테 정확하게 진상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실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말 국회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국민한테 보고를 할 때만 앞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재철** 민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입니다.

지난주 세월호참사 보도를 막는 언론 통제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와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 역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건설·해운·조선·철강 업종의 주력 계열사들 중 일부 그룹들은 구조조정되거나 재무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구조조정 문제 논의에 앞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문제점을 좀 짚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되 10월에 법률 개정안으로 5조 원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의무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법률 개정이 늦어진다면 안 되면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의 그룹에 대해서는 법률 공백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되면 상황이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그야말로 무려 한 38개쯤 되는 법이 전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채이배 의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는 것은 시행령 사안이고, 하지만 5조에서 10조 사이의 그룹에는 계속 공정거래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의무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채이배 의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법 개정이 안 되면 결국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의무는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런 법률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관련법이 매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행령으로 했는데 다른 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결국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따라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법 개정부터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법 개정 문제와 별개로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 그 문제는 5조의 것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앞으로 개정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되던 것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채이배 의원 뭔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8개 원용 법률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참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검토도 진행 중인데 무작정 먼저 시행령을 개정해서 5조에서 10조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시행령으로 해서 지금 5조에서 10조로 그것을 올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채이배 의원 아무튼 국회, 시행령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그것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최소 2008년부터 세계 경제의 침체, 물동량 축소, 해운업 불황으로 조선업종도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모두 경고했습니다. 결국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기업들이 부실화되었고 이 부실기업들에 지금 막대한 세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세금을 넣기 전 부실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원인과 책임을 알아야 이들 회사에 돈을 넣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검토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상황을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동안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장에 구조조정을 몇 달 앞당기고자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재정으로 하지 않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논란만 일으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들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정부를 믿고 알아서 기다려 주면 알아서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지난 과정을 보면 서별관회의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이 운영이 되었고 또한 낙하산 자리 나눠 먹기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폭로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감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그런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반드시 실시하셔서 부실대출의 책임이나 서별관회의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

리고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서별관회의가 이상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채이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경제부총리, 현재 경제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일자리 창출·지키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이배 의원** 구조조정 문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구조조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큰 방향이 일자리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조조정은 지금 막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현안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본확충 12조 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BIS 비율이 부실을 최대 아주 비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산업은행의 경우는 BIS 비율을…… 제가 그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만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 BIS 비율을 비판적으로 봤을 때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물론 그것보다 낮은, 작은 규모가 필요하겠지만 대개 그렇게 해서 합계를 해 보니 12조 정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그러니까 결국 최대치가 12조 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채이배 의원**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자본확충의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제일 비판적인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그것이 그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데 이번에 12조 원 자본확충

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른바 ‘캐피탈 콜(capital call)’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올해 하반기에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아직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이배 의원** 아니, 지금 12조 원을 계산은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플랜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마는 과연 그에 따라서 현재 구조조정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또 그 시장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선업계의 부실 문제가 부실 규모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규모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딱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채이배 의원** 이런 식이라면 결국 우리가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결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 달라 이런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하자는 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펀드를 만들면 그것이 소위 말해 캐피탈 콜이라고 해서 이게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그렇게 지불을 해서 BIS 비율을 맞춰 주는 자본확충을 할 것이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또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결국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또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도 현물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야 되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이 물론 국회의 동의를 일일이 거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혹시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캐피탈 콜이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

서는 이 정도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국회에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국회도 다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를 이렇게 돌아서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할 것이고, 다만 이것을 왜 추경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채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해 놓고, 그러면 그만큼이 다 이미 편성이 돼 묶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자본확충펀드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채이배 의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서별관회의 등에서 불투명한 결정들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양지하시고 이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2013년 4월에 서별관회의에서 STX그룹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당시에 제가 금융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이미 기사에도 나온 내용들인데 모르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채이배 의원** 그후 3개월 후인 7월 말에는 STX조선해양 정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고 당시 산업은행이 2.7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STX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6개월이 지난 2014년 2월에는 다시 신규 자금 1.8조 원의 지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 동안 총 4.5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STX조선해양은 올해 5월 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STX조선해양의 부실경영, 배임·횡령, 분식회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것은 STX에 대한 자금 지원도 당시에 대우조선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즉 STX가 만약에 부도가 나서 그 당시에 기업이 법정관리를 들어간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STX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주가 구속이 되었고 형사적 처벌을 받는 등 그에 상응한 경영상의 책임이 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주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이 부과가 되었는데 산업은행이 4.5조 원을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했는데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놓고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배행위가 있었다든가 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불가측한 미래를 전망해서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 관련한 사람들을 처벌을 한다면 그러면 구조조정을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채이배 의원** 지금 제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 결국 산업은행이든 또는 서별관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했던 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인사적 책임이든 행정적 책임이든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래서 사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를 통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TX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들은 그동안에 국책은행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든가 혹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다든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걸러졌지요.

다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살아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살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구조조정 과정은 아닌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4.5조 원을 만약에 투자하고 그게 투자가 실패가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질 겁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든 정부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 큰 문제가 저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STX조선해양과 굉장히 유사한 이유로 부실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물론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그리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그것을 밝혀 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법인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현재 분식회계라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틀림없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계처리의 잘못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식회계가 있고 하나는 부실한 회계처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이 있겠는데 대우조선해양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1대 주주는 산업은행이고요, 2대 주주는 8.9% 정도를 가진 금융위원회입니다.

○**채이배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실경영을 한 대표이사나 재무담당 이사 등 경영진은 누가 선임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경영진은 대우조선의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지요.

○**채이배 의원** 그 이사회는 누가 선임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이사회는 산업은행이 선임을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같이 했겠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주총 안건으로 올라갔을 테니까 각각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결국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산업은행 출신의 부행장을 CFO로 선임하고 또 기타 비상무이사로는 현직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을 선임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왔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회사에서 각각 CFO나 혹은 은행의 관리자로서, 왜냐하면 대주주이자 채

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필요한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데 이들이 결국 관리를 못하고 부실만 키우고 때로는 배임·횡령, 각종 비리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관리 책임을 충분히 다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저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이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인사조치 통보한 자료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했고 또 필요한 조치는 취해 나갈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인사상 처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전 회장인 홍기택 회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로 통보를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 외에 책임자들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금융위로 통보가 왔고요,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난주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책을 하거나 인사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앞으로 하겠지요.

○**채이배 의원** 결국 관리능력도 없고 책임도 안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를 알고도 일주일 후인 10월 29일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자금 4.2조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저희가 회계법인을 투입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회계법인이 실사를 하고 그 실사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증까지 시켰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완료된 것이 대개 한 10월 말 무렵입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실제 회사에서 공시한 회계자료와 그리고 저희가 실사한 결과에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아, 이것은 분식회계의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된 것이지요. 그 인지도된 내용을 같이 서별관회의에서 관련 기관 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만 감리, 보통 분식회계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에 의해서 판정이 됩니다. 회계법인의 최종 실사보고서를 받아서 감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 보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때 그렇게 모아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별관회의에서 그 분식회계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늦추었다는 것은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7일 날 회계법인에서 정식의 실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제출받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12월 10일 날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혹은 시간적 상황으로 볼 때 결코 서별관회의는 결정을 하는 기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늦춘 사실이 없습니다.

○**채이배 의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를 알고 감리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결정하셨다고 해 놓고 마지막에 ‘서별관회의에서는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다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요, 이런 것이지요.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앞서 부총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경제적인 현안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각 기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자유롭게 충분히 한번 토의를 해 보자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공개이자 비공식 회의로서 존재를 합니다. 이런 회의는 비단 이번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런 협의체였습니다.

그런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이 모아지면 각 기관이 그에 합의된, 즉 모아진 의견대로 각 기관이 개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뭘 했습니까?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정을 했습니다. 회계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아, 이것은 분식회계의 의혹이 틀림없이 있다’ 해서 감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감리 결정이 곧 무엇이나, 즉 분식회계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즉시 감리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구계획으로 1.8조 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6월 8일 자구계획으로 다시 3.4조 원을 추가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월 만에 자구계획 3.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TX조선해양도 단 6개월 만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변경이 되었었지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금융위 또는 산은, 정부가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는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3.4조 원의 자구계획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2조 원에서 3.8조 원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을 세웠을 때 대우조선이 수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대우조선의 자금수지나 재무구조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우조선이 2015년에 109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전제하에서 65억 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올해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절반보다 조금 넘게는 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세워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진행을 실제 해 보니까 2016년 들어서 저희가 전망한, 즉 채권단과 정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주 절벽이 깊었습니다. 즉, 상반기에 한 척도 수주를 하지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제와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자구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것이 조선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업을 정상화시킬 것이냐,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다 해서 3.5조 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컨틴전시 플랜으로 2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선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화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 또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도자료나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료로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채이배 의원**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내용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보도자료로 저희가 외부에 공개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지금 컨틴전시 플랜으로 2조 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컨틴전시 플랜은 대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약 3.6조 원의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지난번 6월 8일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발표할 때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 만일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STX조선해양과 달리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것은 미리 지금 얘기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 잘못되면 너 책임져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누가 구조조정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

입니다.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 다라는 부담 이것이 있다면 구조조정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여부를 따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서 ‘살지 못했으니까 책임져야 한다’, ‘살았으니까 너희는 참 잘했다’ 이런 식의 재단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리고 무능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되도록이면 자기가 맡았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떨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아무튼 정부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있는 일은 소상히 정무위원회든 관련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서별관회의와 같이 비공식적이고 비공개리에 하는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 회의에 와서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작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모든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조금 더 많은 지혜를 모으도록 하는 일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정부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 자체를 자꾸 밀실 행정이다, 투명치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별관회의가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괜찮고 서별관회의에서 회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도 정책과정에서 더 많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앞으로의 관리 책임과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이후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검찰은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서 사장직 유임 로비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결과는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 등 기소된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14년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에 분식회계나 경영비리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국세청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였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모른 척한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증거가 확보돼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난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심증은 있는데도 증거를 못 찾아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자료를 더 수집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게 입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뜻을 다 이루지 못하

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뒤에 수사결과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게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이배 의원**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회의록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정무위에서의 속기록인데요.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나 불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조해서 부실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의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사정 당국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오래 수사를 했습시다마는 같은 사안을 놓고 처음 수사했을 때는 못 밝힌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처음 수사 잘못된 것이 그것이 책임을 질 일이나? 책임질 일이면 그때그때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를 못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처음 수사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바로 책임을 묻거나, 이것은 무능이라든지 또는 은폐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한 말씀입니다.

○**채이배 의원** 그렇다면 검찰과 국세청이 당시에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아마 그 감찰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을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실은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내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는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새로운 의혹이 나왔으니까 감찰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의혹 제기를 가지고 수사한 사람 또 조사한 분들에 대해서 감찰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찰의 단초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아까 보여 드린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못 찾았다고 넘어갔다면 굉장히 부실한 수사였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리는 조선소에서 '물량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량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채이배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채이배 의원** 조선소에서의 작업은 사내하도급으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단계까지 내려가는데 그 각 단계에서 물량, 즉 일감이 있으면 일용직팀을 꾸려서 작업에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분들이 물량팀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조선업 3사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저 표에서 소속 외 근로자 수입니다. 11만 명입니다. 이들이 현재 제가 파악키로는 물량팀이거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거제도 모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면 물량팀을 구하는 구인광고입니다. 이 물량팀에 속해 일하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루 일하고 또 일감이 없으면 어느 순간 다시 실업, 실직의 상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실업대책은 그림의 떡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나 실업급여 조건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실업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사안별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물량팀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입증자료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가능한 것이 조선소의 입출입 기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산업 구조조정 과정이 경영 능력이 나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산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진단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당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실업 대책과 지역경제 안정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채이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시 출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자국 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석구석에는 낡고 교조적인 규제가 얼기설기 얽혀 창의적인 투자활동과 고용 창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과감한 규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막힌 경제 혈류를 뚫고, 막힌 혈관을 뚫고 우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혁신적 구조조정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난 시대와

달리 우리가 먼저 변하고 개혁하면 세계가 우리의 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서는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은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비정상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고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인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민과 함께 또 기업과 함께 같이 잘살아 보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 보자, 이런 노력을 합심해서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 경제가 단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업가정신 지수가 지난 70년대 중반에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여러 종류의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통계도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동안 기업도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었고, 규제도 있었고, 경제적인 현실적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글로벌경쟁에 나서는 우리 기업인들 또 우리 선수들에게 규제덩어리라는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채우고 조세부담 가중이라는 짐을 두 어깨에 지워 놓고서 마치 우리가 우승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형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에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온 국민의 근면정신과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뒷받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려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틀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리고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정부도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규제 개선한 것이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1만 건이 넘는 그런 많은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현재 남아 있는 잔존 규제들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기획재정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장 침체의 근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것은 역시 세계 경제 전체가 저성장을 하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유가 같은 것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세계 경제 전체가 구조적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 우리 역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세가 미약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이런 성장과 어떤 고용의 둔화의 늪에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는 불합리한 규제가 족쇄로 작용해서 투자활동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성장을 늦추고 고용부진의 악순환의 고리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갈라파고스 섬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섬입니다.

○**송석준 의원** 예, 특이한 동물들이 많이 사는 섬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딱 떨어져 있어 가지고……

○**송석준 의원** 그런데 규제와 관련해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들어 봤

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사나 어느 곳에도 없는 독특한 규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송석준 의원** 얼마 전 전경련이 분석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살펴보니 대표적인 것으로 수도권 규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전경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동 자료에 의하면 갈라파고스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11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16만 명의 일자리는 2014년 청년실업자 수 38만 5000명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국제적 흐름과 기준에 동떨어진 수도권 규제를 풀면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성장의 침체를 벗어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뭐 이 전경련의 연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규제를 풀면 수도권이든 아니든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본 의원은 지금부터 수도권 규제가 얼마나 교조적인지, 그리고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조목조목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도권 지역 중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팔당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자연보전권역을 형성하는 팔당수계, 그중에서도 남한강의 수계가 모이는 곳이 삼합리섬이라는 데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거기에는 주수계인 남한강과 2차 수계인 섬강,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섬강, 충청북도에서 올라오는 남한강이 모이고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가르는 청미천, 3개의 수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곳 기준으로 경기도의 동남권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보전권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똑같이 물을 형성하는데 바로 주수계인 충청북도 남한강수계 그리고 강원도 섬강수계 이쪽 지역은 규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답답한 현장,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대로 삼합리섬은 여주, 충청북도, 강원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팔당수계의 주수계인 남한강이 세 물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섬강은 강원도에서 흘러오고요. 10%도 안 되는 물만이 청미천에서 가는데 그것도 반은 충청북도에서 가고 반만이 경기도 동남부권에서 흘러갑니다.

바로 저 삼합리섬이 이 자연보전권역 설정의 모순, 잘못된 현상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유롭게 개발이 되고 대학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경기 동남부권, 그야말로 5%밖에 안 되는 청미천으로 물을 흘려주는 경기 동남부권에는 저렇게 아무런 공장 신·증설, 대학 신설·이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흐르는 물이 청미천입니다. 청미천 저 아래쪽으로가 음성, 장호원입니다. 충청북도 장호원이고요. 위쪽이 경기도 장호원인데 위쪽은 건물이 즐비하지요. 아래쪽은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옛날 경기도 장호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바로 저 청미천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 대학들이 있지요. 4년제 대학이 들어옵니다. 청미천 아래쪽에는. 그런데 청미천 위쪽에는 대학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잘못된 수도권 규제 혁신을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총리님, 잘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잘 봤습니다.

○송석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연구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걱정과 또 건의를 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특정 지역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의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향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의원 분명한 것은 불합리한 것은 개선

해야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나 이제 수도권의 과밀화라든지 또는 과도한 개발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 하는 이것도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 총리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82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에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교통난이라든지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저도 25년간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규제 연혁을 지켜봤지만 특히 지난 90년대 중반부터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송석준 의원 혹시 구체적인 내용 좀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2000년대 중반부터 대외적인 환경 변화들을 감안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그 대표적인 것이 2005년도에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리고 2008년도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연동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핵심과제로 추진됐던 겁니다. 지금 이 과제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여러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대부분의 수도권 규제가.....

○송석준 의원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이 참여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전혀 개정 안 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개정을 위한 노력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예를 들면 규제 개혁을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규제 때문에 신산업을 스타트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막자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입법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지역의 거점도시에 그런 규제프리존들을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의원** 어쨌든 수정법은 제정된 지 35년이 흘렀습니다. 규제 완화 논의가 된 지도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규제의 틀이 바뀌지 않았어요, 법률 차원에서. 수도권의 낡고 교조적인 규제의 틀로부터 이제는 해방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균형발전의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한 경제를 살리는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살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저는 다시 한번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대국민 약속,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두 가지의 가치를 고려해서 수도권에서도 전혀 지금 규제 개혁이 안 되어, 규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굉장히 많은 애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그런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범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야말로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제한돼서 투자를 못 한 그런 기업들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당장 공장 증설이 필요한데 입지 규제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기업이 21개 기업에 투자액만 9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입지를 고려했다가 결국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해외로 발길을 돌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수도권의 규제 때문에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이뿐이 아닙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던 유망한 해외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신·증설을, 증설을 못 하니까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이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의 출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지방 이전 대신에 기업들을 해외로 몰아가는 법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문제 있는 법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법 자체를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제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이런 보완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이 2009년 이후에만 62개 기업에 3조 2000억에 이른답니다. 1만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 기회가 사라졌답니다. 28개사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걱정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음, 자연보전권역에 인구가 많아지면 대학이 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지방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거, 이거는 허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국가 예산의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언제, 왜 도입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1999년도에 옛날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서 그때 도입이 됐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이 국회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예타 선정 기준 도입이 99년에 이루어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송석준 의원**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 경제 규모, 재정 지출 규모나 이런 GDP 규모,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뭐 GDP 총량으로도 한 2.4배, 재정 지출도 비슷하게 2.6배 이렇게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타 선정 기준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도입된 지. 그런데 우리 경제 규모가 2~3배가량 증가했어요. 그런데 예타 선정 기준 시에 도입 당시 기준 500억 원이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사업도 예타 결과가 나중에 잘못됐다는 이유로 예산이 다시 회수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뭐 예타를 해서 그것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사례가 이천에, 이천에서 여주로 가는 70호선 사례가 있는데요. 이 도로 보십시오, 사진에. 도로 꽉꽉 막히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석준 의원** 그리고 일부 사업이 이미 추진됐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타를 나중에 하더니 이게 수지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돼서 지난해 예산이 회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사진에 나온 걸로 보면 예타를 오히려 통과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어떤 특정 시점에 이렇게 차가 몰렸다가 또 탄 때는 좀 한산하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사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비타당성조사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도면을 다시 보면요, 이게 14km밖에 안 되는데 이 도로는 곧 완공되는 자동차전용도로하고 IC로 또 만나고요. 또 다음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또 IC로 만나고, 또 새로 건설되는 제2영동고속도로랑 IC로 만나는 정말 중요한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포보하고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예타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예산까지 회수해 가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 개별 사업

별로 뭐 또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왔는지는 제가 뭐 데이터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꼭 필요한, 그런 굉장히 혼잡도가 심하고, 그런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무슨 변수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소위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도 좀 바꿀 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혹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사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저는 예타제도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까 예타 선정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향 조정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오래전에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상향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사업은 또 분야별로 특수성이 따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다음은 총리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업계, 수산식품업계가 걱정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화훼업계를 포함해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축산업계의 피해 예상규모가 4115억 원에 이르는 등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김영란, 부정청탁방지법인데요.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그런 법안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 등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 계십니까?

본 의원은 세종시 이주 1세대 공무원 출신으로서 세종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관님, 세종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이전이 마무리되고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아무래도 자족기반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과 교통망을 개선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세종시간의 직통 교통망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KTX 그리고 고속도로, 신속한 개통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시는 대로 고속도로는 지금도 경부선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기로 되어 있고, KTX와의 연결은 지금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가 한 17km 돼서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역을 하나 신설하는 문제는 또 인근 역 간의 문제라든지 또 철도 운영의 효율성 같은 것을 재정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 새만금사업 추진,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새만금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참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고 대상 지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 기반시설, 특히 동서 2축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무투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내놨고 또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하여튼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석준 의원** 보다 길게 보고 보다 과감한 투자, 과감한 투자 유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무조정실이나 또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기획재정부장관님, 잠깐. 일부에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석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지금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경제환경이나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보나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나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외국의 사례로 봐도 우리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도 많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낮은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높은 나라들도 대개 세율을 낮춰 가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보다 낮아진 나라들도 과거에는 우리보다 매우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법인세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법인세수가 줄었나요? 요새 줄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세율도 낮지 않고 세수도 줄지 않는데 경제에 부담만 주면서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이라는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송석준 초선이 좀 헤맨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고향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정말 일거리 창출해야 되고, 우리가 또 저 성장의 늪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그러하듯이 과감하게 규제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감하게 개혁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비정상적 제도 과감하게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구성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20대 국회를 여는 처음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하고 저하고는 많이 대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법무부장관도 하시고 과거 변호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황교안** 예.

○**홍익표 의원** 시행령 18조에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산업위원회 지금 야당 간사입니다. 제가 산하기관인 한전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 이것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압력으로 느껴까요, 그냥 전화 왔다 하고 무시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말을 어떤 텍스트 속에서 얘기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 전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의 대부분을 산하기관이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법과의 관계, 혹시 총리께서는 왁더독(Wag the Dog)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왁더독?

○**국무총리 황교안** 왁……

○**홍익표 의원** 왁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에 있어서 시행령이 법안의 취지를 흔들면 이게 정상적일까요, 아닐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요.

임종룡 금융위원장님부터 나오십시오.

구조조정, 어려운 작업인데 그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서별관회의가 지금 말이 많은데 이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공기록물 관리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총리께서는 위법적일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까 총리님,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앞선 질문에서 드렸습시다라는 법 시행령의 취지나 이런 것을 보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통상적으로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에서 그런 회의 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어요. 그렇게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회의자료 있고, 필요하다면 그 회의자료는 만약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비밀자료로 묶어야지요. 사실 대외비 관리도 문제지만 1급, 2급, 3급으로 묶어서 일정 기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여러 가지 정보의 관리 또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홍익표 의원** 크게 보면 오늘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후세에게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

고 오늘 한 결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옳은 결정이면 옳은 결정대로, 나쁜 결정은 나쁜 결정대로 교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회의자료 일부가 공개됐는데,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보도만 아침에 봤습니다.

○**홍익표 의원** 금융위원회 해명자료 보고받으셨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 자료가 근거 없는 자료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거니와 출처가 명확치 않은 자료입니다.

○**홍익표 의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이 자료를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지요.

○**홍익표 의원** 이 자료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제가 만약에……

○**홍익표 의원** 서별관회의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자료로?

○**금융위원장 임종룡** 서별관회의에서 회의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 자료로 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자료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의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자료는 저도 처음 봅니다.

○**홍익표 의원** 소위 얘기하는 경제현안회의, 우리가 약칭, 일명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회의, 당시에 10월 22일 날 이 회의자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서별관회의는 의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공식·비공개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홍익표 의원** 자,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저는 처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처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홍익표 의원** 이거 국민에다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만약에 이게 이후에 금융위원회 자료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 모든 책임을 위원장께서 정치적·법적 책임 다 지실 용의가 있으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께서 입수하신 자료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들고 계신 자료는 제가 처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실제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출처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의원** 자, PPT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현안회의,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다음 페이지 넘기면 목차가 나옵니다. 저 목차를 보셔도 기억이 안 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사퇴할 거냐고 물어봐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질문지를 드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갖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익표 의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불성실한 것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 의원님께서도 지금 갑자기 안건을 가져오셔서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라고 하시면 제가 보지도 않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까?

○**홍익표 의원** 이미 한겨레 신문 보도가 됐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했고 이 내용을 준비한 게 금융위원회인데 이 내용을 모른다고, 이 자료가 허위라고 얘기하면……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출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지금 보시면 모르세요? 그렇게 똑똑하신 금융위원장께서 이 자료를 보고도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중대한 회의를 한 그 회의 자료를 모르시겠나?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 자료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지요. 서별관회의의 논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데 ‘그 자료하고 이것하고 일치하느냐?’ 하면 그 자

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지 그것이 일치하는지 안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지만 보여 주시고 ‘이 자료입니까?’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홍익표 의원** 자,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서별관회의가 단순한 협의가 아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등 6명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산업은행장이 같이 왔고요, 이 자리에. 그래서 10월 22일 날 회의하고 10월 23일 날 당초 이것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산업은행장이.

그런데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펼 펼 뚝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징구서를 이에 대해 가져오라고 해서, 그 징구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징구서 받는 동안 허겁지겁 산업은행 실무자가 대우조선 갔다 오면서 일주일 간 순연됩니다. 그래서 요거 발표하고…… 바로 그다음 날, 10월 29일 날 산업은행이 발표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그 일정대로, 이렇게 순연대로 갑니다. 모양새는 산업은행, 소위 얘기해서 채권은행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결정돼 있는 내용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비공식 회의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경제부총리하고 경제수석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이 함께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그냥 브레인스토밍이 됩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정 자체가 정확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22일 서별관회의를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우의 최종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것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정상화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협의된 내용을 서별관회의의 논의 안건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 당시에 회의에서 의견이 교환되기를 자구계획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 지원을 먼저 실행하고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타 이밍이 안 맞지 않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노조에서도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그 안건에는 26일쯤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늦어진 겁니다.

○**홍익표 의원** 자, 이 안에 대응별 세 가지 시나리오 검토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1안 법정관리, 2안은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3안이 국책은행에 의한 정상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홍익표 의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방법은 국책 금융기관 주도로 정상화한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랬기 때문에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니까 아무런 할 일도 없었고 이미 나를 유박지르고 나는 시쳇말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얘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홍익표 의원** 그날 최경환 부총리가 펄펄 뛰면서 밀어붙였잖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산업은행에서도 그에 관한 내용을 밝혔고, 또 홍기택 전 회장조차도 자신이 해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특히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을 분담하는 문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서로 지원 규모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홍익표 의원** 자,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주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합의를 조정해 줍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좀 듣고 얘기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익표 의원** PPT를 보면, 우선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분식에 대해서, 이미 이 내용에서 대우조선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식회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타이틀이 회계분식의 의혹입니다.

자, 회계분식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채권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 전문가이시니까.

분식회계의 규모를 알고 지원을 할지, 얼마를 넣으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분식 규모를 모르는데 먼저 지원합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답변드릴까요?

○**홍익표 의원** 예.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회계장부, 회계자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7월 달에 저희가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실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실사도 믿을 수 없다 해서, 아니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검증하는, 회계법인에 의한 실사를 재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가지고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즉 분식의 의혹이 있는 그 수치를 기초로 해서 정상화 방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 질문이신데 저희는 그렇게 공시되어 있는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사 과정은……

○**홍익표 의원** 저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분식의 우려가 있다면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 그 분식에 대해서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지원할지 안 할지, 이것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하는 겁니다.

○**홍익표 의원** 그런데 왜 순서가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지원 결정하고, 돈을 넣기로 결정하고 분식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가서 1월 달에 가서 분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저희가 실사를 위해서, 대우조선이 과연 정말 어떤 상태냐, 지금 공시되어 있는 회계자료대로의 상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3개월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그 실사 나온 결과가 공시되어 있는 회계자료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위원장님, PPT 그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PPT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1안, 2안에 대해서는 이러 저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자료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3안, 국책금융 주도로 정상화해야 된다, 국책금융기관 주도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불가피, 이 결론을 내립니다.

즉 분식 규모와 관계없이 분식 유무, 분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없이 이미 정부는, 당시 모였던 서별관회의에서 경제 현안 회의를 하신 분들은 이 방침을 결정하고 시작,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놓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실사 내용과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분식회계의 의혹에 관한 것도 자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정부가 기존의 채권단뿐만 아니라, 무역공사 포함입니다. 신규로, 여기 지워져 있지만 얼마인지 아시지요? 추가로 50억 불을 모으기로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부담해서 45억 불을 모으기로, 15억씩 해서 45억 불 모으고 기타 여타 은

행이 나머지 10%인 5억 불을 모으자, 이렇게 됐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런 논의가……

○**홍익표 의원** 신규 RG에 대해서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홍익표 의원** 제 얘기는 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 놓고 회의를 했고 산업은행장하고 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회의에.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이 규모에 대한 논의는 사전회의를 통해서 이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보 간에 협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인 안으로 만들어서, 그 최종적인 안을 만들 때 회의 주제는 제가 했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 참여를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래서 그 안건을 서별관 회의에 올려서 ‘자, 관계기관들이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방안에 대해서 각자 각 기관별로 얘기를 하자,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토론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논의한 회의가 서별관회의인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 논의한 대로 다 그렇게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채권단 간의 혹은 기관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서별관회의에 올라가서 나머지 기관들의 기관장님들께서 ‘그런 방향이 맞겠다’, 물론 서로 충분히 다른 의견도 개진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 하고……

자,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은행의 자금 지원은 은행의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은행이 출자전환을 하게 되어서 예외 승인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각각의 기관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논의되고 협의되는 그 과정의 하나가 서별관회의인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정상업무 처리와 관련되어서 이후에 산은, 국책은행들의 임직원에 대해서 이 지침을 따를 경우에 면책처리 해 주겠다, 논의했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마는 구조조정을 비유하자면 아주 중병이 들어 있는 환자에 외과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의 책임을 전부 다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최선을 다했는데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의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수술을 할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자,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됐어요. 서별관회의는 결정한 회의가 아니다, 은행들이, 채권단이 결정한 거다, 나는 책임 없어, 자기들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하면 최경환 부총리, 안중범 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책금융기관 면책으로, 그러면 이후에 분식을 막대한 규모에서……

아까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해 가지고 2조 원까지 추가하면 거의 1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최악의 경우. 그렇지요?

자, 그 10조 원의 국가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왜 안 지겠습니까? 관련된 법규와 또 기관 간에 취해야 될 바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이라는 것은, 즉 중병에 걸린 기업의 경우에, 그 기업을 꼭 살려내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아무도 구조조정을 안 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책결정 과정을 블랙박스에 넣어 놓고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지요. 채권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나서서, 감독기관이 그리고 그 기관들은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으로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합시다', 조정을 해 줬습니다. 왜냐? 당시의 대우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지요. 또 마땅히 책임져라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별관회의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의를 하지 말라고 계속하신다면 관계 부처 간에 혹은 관계 기관 간에 어떻게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국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홍익표 의원** 임 위원장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정부 부처에 있어 봐서 그런 회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의록은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왜?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련 법규를 따져서……

**○홍익표 의원** 정부의 모든 회의는요, 그 정도 장관급 세 분 이상 모였는데……

비공식회의와 비공개회의는 다릅니다. 필요에 의해서 비공개회의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비밀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 기록을 안 남기면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서별관회의의 문제는 블랙박스 속에 숨었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정책 당국자들이.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자기 재임기간 중에만 이런 핵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숨은 거예요, 선거 앞두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최근 이것 발표 이전부터 증권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채권가격이 오른 것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 전임 최 부총리께서 10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와 이 문제를 논의하게끔 이사안을 끄집어내신 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피하고자 했으면 아예 논의를 안 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채권단에서 알아서 해라 이려고 말했을 겁니다.

○**홍익표 의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들은 것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끊임없이 국책은행을 통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걱정은 안해요. 오직 시중은행 걱정만 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홍익표 의원** 금융기관에 대한 걱정만 해요. 여기에 심지어 이 안, 국책은행 주도 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한 줄 있습니다. ‘나랏돈이 무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무시하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어느 공무원이 왜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대우조선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었습니다.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채권자는 누구였느냐? 수출입은행이었습니다. 두 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은행까지 다 모여라 해서 일반은행도 분담해서 이것을 지원하라고 할 근거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체에 시스템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것은 전담해서 처리하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모럴해저드가 생겼지요, 금융기관은.

잘못된 기업, 부실한 기업에게 무한정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페널티를 묻습니까? 아무…… 그 기관들은 그냥 자기가 쏟아부은 돈 그냥 받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홍익표 의원** 이게 소위 얘기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모럴해저드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채권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있습니다. 일반은행들의 여신이 많지가 않거든요.

○**홍익표 의원** 왜요, 위원장님께서도 지주회사 회장으로 계셨던 농협도 한 7% 이상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농협도 일부 여신이 있지요. 하지만 전체……

○**홍익표 의원** 일부가 아니라 세 번째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RG, 즉 선박을 지을 때 보증을 서는 그 보증에 대한 여신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보증을 설 수 있는 기관이 국책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활용해서 보증을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여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수출산업입니다.

수출산업이면 이것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여신이 국책금융기관에 집중돼 있었던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익표 의원** 이 자료를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논의되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나?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 그러면 이 결정을 알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시장에서 혜택을 보겠네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자, 의원님 비공식회의……

○**홍익표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비공식회의이면……

○**홍익표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익표 의원** 이미 서별관회의 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이 올라갔고 그것을 사들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뭐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런 것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 비공식회의에서 낱알이 어느 기관은 무슨 얘기 했더라, 어느 기관은 뭐 얘기했더라 하면 사후적으로 이것을 의식해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번 자유롭고 그리고 충분히 토론을 해 보자.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이 회의를 시작하면. 그런 목적의 회의인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자, 들어가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익표 의원** 들어가시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익표 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부는 서별관회의라는 블랙박스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숨겼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정상화 과정에서 소요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과정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이미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별관회의라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해 놓고 그것을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정책결정 과정과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그다음에 구조조정의 기준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또 분식회계에 대한 관련 회계법인까지 포함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묻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여당 의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부총리 좀 나와 보세요.

이 정부의 대기업 사랑은 참 끝도 없습니다.

6월 8일 상호출자한 집단 기준을 바꿨지요? 그것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홍익표 의원** 5조에서 10조 원으로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5조 올리기로 시행령을 정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대개 한 5개 되지요, 그 주요 내용이? 지정 기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 기준에 의

해서 빠지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익표 의원** 아니요. 기준, 정부 발표 내용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잘 아시니까 제가 별로 설명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홍익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조에서 10조원 되면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는데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집단의 경쟁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홍익표 의원** 다음 페이지, 사내유보금도 계속 700조가 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에.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굉장히 이명박 정부 때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걸 또 지금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63개에서 28개로 줄어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대상이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카카오 얘기하지요? 카카오가 5조 원을 막 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맨 위에 있는 것은 하림이 9조 9000억 원쯤 됩니다, 자산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결국은 소위 IT 기업이라는 카카이를 빌미로 그 위에 있는 수많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다 면죄부를 받은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면죄부라고……

○**홍익표 의원**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례가 무분별하게 많이 나와요. 골목 시장에 준대규모 점포 SSM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SS……

○**홍익표 의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산업부장관에게 물어봤더니 산업부장관의 답변은 자율협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업종제한으로요, 적합업종으로.

적합업종은 뭐니까? 자율협약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홍익표 의원** 대기업한테는 법으로 해 주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자율협약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집하기, 그것은 왜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대기업은, 이것은 정말 대기업 특혜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카카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계속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채이배 의원님 말씀에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은, 저희가 그래서 5조 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을 올리는 것이 무슨 그 사이에 있는 대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SSM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의원** 이 법의 관련법을 법대로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기준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그것이 대기업집단,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을 10조 원으로 올리는, 그 위가 정말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될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하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기준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대기업집단을 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익표 의원**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좀 크게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와 기업 중심의 세계화가 결국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 간 또 한 국가 내에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지난 90년대 이후 추진돼 왔던 약 30년에 걸친 세계화는 중대한 위기에 부딪힐 것이고 이것은 세계의 안전을 훨씬 더 위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국가의 미래 그리고 세계화의 새로운 어젠다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부터 양극화 그리고 격차 해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세균**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 의원(29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정중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조원진	조용천	조정식	조훈현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노회찬	나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박병석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박정영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황주홍	황희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개의 시 재석 의원(230인)			
백혜련	변재일	서청원	서형수				
설훈원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권칠승	금대섭	김경수	김경진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이양수	이연주	이완영	이용득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경미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맹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박병석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박준영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재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훈원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성일중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기현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심재권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호영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오세정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원식  
 엄용수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은혜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상돈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유섭 정인화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호영 진영 채이배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철호  
 황주홍 황희

○속개 시 재석 의원(108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광대훈 광상도  
 권미혁 기동민 김경수 김광림  
 김규환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삼화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세연 김승희  
 김영호 김중석 김중훈 김한정  
 김한표 김현권 문미옥 문희상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병석  
 박완수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재현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재철 양승조 엄용수 안상수  
 양승조 오신환 오영훈 어기구  
 유동수 유민봉 유상호 유승희  
 윤영일 윤호중 이언주 이종명  
 이상돈 이재정 이찬열 이철규  
 이은권 이현승 이현재 임이자  
 이진복 이찬열 이현재 임이자  
 이현승 이현재 임이자  
 정성호 정양석 정유섭  
 정중섭 정대옥 조웅천  
 주광덕 채이배 최경환(국)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홍영표 홍익표 황영철

○산회 시 재석 의원(145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훈식  
 광대훈 광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도읍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재 김중민 김중회  
 김중훈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완주 박남춘 박병석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심재철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엄동열 오영훈 우상호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상직 윤영일  
 윤종필 이만희 이상돈 이용주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종배  
 이원욱 이인영 이철희 이태규

이 현 재 이 훈 임 이 자 전 현 회  
 전 혜 숙 전 회 경 정 갑 윤 정 세 균  
 정 인 화 정 진 석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진 선 미 채 이 배 최 경 환(국)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혜 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청가 의원(2인)

이 학 영 정 운 천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우 윤 근  
 입 법 차 장 구 기 성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황 교 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 일 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석

○출석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 관 섭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 경 환  
 공정거래위원장 정 재 찬  
 금융위원장 임 중 룡

【보고사항】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정 보	신경민(미)	더불어민주당	2016. 6. 29.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김동철(국)	국민의당	2016. 7. 1.
	김성식(기)		
	김중회(농)		
	장병완(산)		
윤리특별	김삼화(환)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도읍	새누리당	2016. 6. 22.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외교통일	윤영석	새누리당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외교통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16. 6. 22.
	이태규	국민의당	
안전행정	윤재옥	새누리당	2016. 6. 24.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박대출	새누리당	2016. 6. 2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국민의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서영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2016. 6. 28.
국 방	추미애	서영교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리특별	김동철	오세정	국민의당	2016. 7. 1.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철규 장제원 주호영	새누리당	2016. 6. 23.

○의안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윤상현·곽대훈·김석기·박맹우·박찬우·성일중·윤영석·이현승·장석춘·정용기·정유섭·조경태·지상욱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신용현·오세정·최도자·정인화·김중회·김삼화·최경환(국)·윤영일·권은희·박준영·김중로·장정숙·이동섭·송기석·이태규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이종걸·전재수·제윤경·김경진·심상정·안규백·한정애·민병두·노회찬·신경민·박용진 의원 발의)

6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이우현·윤재옥·김명연·박덕흠·이장우·홍철호·김성원·이현승·권석창·김민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이우현·신상진·함진규·윤재옥·김명연·박덕흠·이장우·홍철호·김성원·한선교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2. 정부 제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정용기·이종배·유기준·김규환·정성호·김삼화·박덕흠·장석춘·이종명·이명수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박인숙·정태옥·김세연·장제원·박덕흠·김성원·이종배·金成泰·이명수·이학재 의원 발의)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이우현·신상진·함진규·윤재옥·김명연·박덕흠·이장우·홍철호·김성원·한선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2. 정부 제출)

6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2. 정부 제출)

6월 2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6. 6. 22. 정부 제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이종배·추경호·김종태·신상진·정태옥·조정대·홍철호·송석준·김석기·박인숙·정유섭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2. 정부 제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박인숙·정태옥·송석준·윤한홍·박덕흠·정우택·김승희·김성원·이종배·이명수·이학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박인숙·정태옥·김세연·황주홍·윤한홍·신용현·정유섭·박덕흠·김성원·이종배·이명수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신경민·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김동철·전혜숙·원혜영·김중로·



김경진 · 이용호 · 이찬열 · 이동섭 · 김광수 · 김삼화 · 황주홍 · 김관영 · 손금주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 박주선 · 박광운 · 이춘석 ·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 이용주 · 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6. 22. 정부 제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정유섭 · 정갑윤 · 강석호 · 안상수 · 이학재 · 지상욱 · 권석창 · 김성원 · 이종구 · 강효상 · 김순례 · 유재중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정유섭 · 안상수 · 이학재 · 지상욱 · 김성원 · 송석준 · 이종구 · 정병국 · 신상진 · 홍일표 · 전희경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 박주선 · 박광운 · 이춘석 ·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 이용주 · 박준영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 박주선 · 박광운 · 이춘석 ·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 이용주 · 박준영 의원 발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 박주선 · 박광운 · 이춘석 ·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 이용주 · 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6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2016. 6. 23. 우상호 · 박지원 · 노회찬 의원 외 163인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23. 김관영 · 김광수 · 김경진 · 유성엽 · 박주현 · 주승용 · 주호영 · 추미애 · 장병완 · 홍의락 · 이춘석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23. 김해영 · 박광운 · 이재정 · 이춘석 · 윤관석 · 박주민 · 윤후덕 · 제윤경 · 어기구 · 황희 · 신경민 · 김민기 · 이찬열 · 김관영 · 권칠승 · 윤호중 · 신동근 ·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3. 최명길 · 강병원 · 이원욱 · 김경협 · 설훈 · 김병관 · 김영주 · 제윤경 · 고용진 · 김영진 · 정춘숙 · 김두관 · 한정애 · 박용진 의원 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김학용 · 김경진 · 심재권 · 황주홍 · 오신환 · 함진규 · 이종명 · 김종태 · 김성태 · 박덕흠 의원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6. 6. 23. 정태욱 · 이명수 · 추경호 · 김도읍 · 강석호 · 이종배 · 경대수 · 박찬우 · 김명연 · 이채익 · 이완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3. 김동철 · 이찬열 · 김경진 · 정성호 · 위성곤 · 변재일 · 김광수 · 서영교 · 김삼화 · 윤종오 · 박주민 · 전해숙 · 최도자 · 추혜선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3. 안철수 · 김관영 · 박주선 · 장병완 · 권은희 · 황주홍 · 주승용 · 김동철 · 박지원 · 천정배 · 김경진 · 손금주 · 김광수 · 김중로 · 최도자 · 신용현 · 박준영 · 채이배 · 박주현 · 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안철수 · 김관영 · 박주선 · 장병완 · 권은희 · 황주홍 · 주승용 · 김동철 · 박지원 · 천정배 · 김경진 · 손금주 · 신용현 · 박준영 · 채이배 · 박주현 · 장정숙 의원 발의)

6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6. 23. 정부 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경진·강창일·윤후덕·최도자·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6. 23. 정부 제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박홍근·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이인영·김경수·이용득·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김광수·김종희·이동섭·박주선·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이명수·김기선·김명연·박명재·김성찬·성일종·곽대훈·홍철호·윤상직·박성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정유섭·안상수·윤영일·강석호·권석창·이채익·윤한홍·홍철호·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이학재·유승민·김세연·김광림·함진규·이은권·민홍철·황주홍·홍철호·주광덕·이우현·곽상도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오제세·김종희·황주홍·문미옥·이찬열·조정식·김관영·정성호·심재권·양승조 의원 발의)

6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부겸·황희·신경민·이인영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신용현·오세정·최도자·정인화·김종희·김삼화·최경환(국)·윤영일·권은희·박준영·김중로·장정숙·이동섭·송기석·이대규·김성식·안철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김해영·박광운·이재정·이춘석·백혜련·윤관석·박주민·윤후덕·제윤경·강창일·어기구·신경민·홍의락·김광수·이동섭·이철희·김민기·이찬열·김관영·권칠승·윤호중·정성호 의원 발의)

6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3. 김관영·김광수·김경진·김동철·김삼화·김종희·박주선·손금주·신용현·윤후덕·주승용 의원 발의)

6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박성중·곽상도·김무성·김재경·김종석·김학용·민홍철·송석준·신상진·윤한홍·이군현·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양석·정운천 의원 발의)

6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추경호·김광립·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찬열·김종희·윤호중·안상수·김해영·민병두·김종민·박광온·최도자·이춘석·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추경호·김광립·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

6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민홍철·김철민·김한정·박완주·노웅래·윤상직·신경민·양승조·장병완·조정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성일종·김석기·나경원·이명수·홍문표·김도읍·강효상·김태흠·김성찬·권성동·송희경·강석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권성동·경대수·주광덕·김학용·장제원·이주영·이철규·이양수·이종명·성일종 의원 발의)

6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

주승용·민홍철·김철민·김한정·박주민·신경민·양승조·장병완·조정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6. 6. 24.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권성동·경대수·주광덕·김학용·장제원·이철규·이완영·이양수·이종명·성일종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유은혜·백혜련·윤후덕·조승래·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한정애·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안규백·김영진·전재수·김정우·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오영훈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유은혜·백혜련·윤후덕·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손혜원·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김영진·전재수·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윤관석·손혜원·신경민·안규백·홍의락·정성호·이찬열·신동근·백혜련·이재정·송영길·서영교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6. 6. 24. 정부 제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金成泰·원유철·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홍문표·김용태·정유섭·이종명·이명수·김재경·정갑윤·경대수·김태흠·위성곤·김한정 의원 발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4. 박완주·변재일·문미옥·민홍철·

김정우 · 강훈식 · 이용득 · 제윤경 · 이개호 · 권칠승 · 양승조 · 백혜련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권성동 · 경대수 · 주광덕 · 김학용 · 장제원 · 이주영 · 이철규 · 이양수 · 이종명 · 성일종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나경원 · 성일종 · 홍일표 · 곽대훈 · 염동열 · 경대수 · 문진국 · 金成泰 · 홍문중 · 김세연 · 원유철 · 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개호 · 위성곤 · 이찬열 · 주승용 · 민홍철 · 김철민 · 김한정 · 노웅래 · 신경민 · 조정식 의원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홍문표 · 경대수 · 이주영 · 이군현 · 김광림 · 황영철 · 이정현 · 이진복 · 박순자 · 박덕흠 · 김중태 · 위성곤 · 윤상직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개호 · 위성곤 · 이찬열 · 박경미 · 주승용 · 박주민 · 민홍철 · 김철민 · 김한정 · 노웅래 · 신경민 · 양승조 · 조정식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개호 · 위성곤 · 이찬열 · 박경미 · 주승용 · 박주민 · 민홍철 · 김철민 · 김한정 · 노웅래 · 신경민 · 양승조 · 조정식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4. 정부 제출)

이상 5건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4. 정부 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개호 · 위성곤 · 이찬열 · 주승용 ·

민홍철 · 김철민 · 김한정 · 박완주 · 노웅래 · 신경민 · 양승조 · 장병완 · 조정식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개호 · 위성곤 · 이찬열 · 주승용 · 민홍철 · 김철민 · 김한정 · 노웅래 · 신경민 · 장병완 · 조정식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종배 · 이완영 · 정우택 · 추경호 · 김석기 · 박인숙 · 정유섭 · 이우현 · 곽상도 · 김광림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윤상직 · 홍문표 · 이개호 · 위성곤 · 황영철 · 이정현 · 이채익 · 이진복 · 김광림 · 이군현 · 강길부 · 박덕흠 · 이현재 · 곽대훈 · 유기준 · 여상규 · 최연혜 · 이철우 · 조경태 의원 발의)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박성중 · 곽상도 · 김무성 · 김재경 · 김종석 · 김학용 · 송석준 · 신상진 · 윤한홍 · 이군현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양석 · 정운천 · 민홍철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성일종 · 김도읍 · 김태흠 · 김성찬 · 권성동 · 이채익 · 이명수 · 민경욱 · 김석기 · 홍문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성일종 · 김석기 · 나경원 · 이명수 · 홍문중 · 김도읍 · 강효상 · 김태흠 · 김성찬 · 권성동 · 송희경 · 강석진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6. 6. 24.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이학재 · 함진규 · 이완영 · 윤재욱 · 박덕흠 · 주호영 · 민홍철 · 이종명 · 홍철호 ·

김도읍 의원 발의)

6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곽상도 · 유승민 · 곽대훈 · 김석기 · 추경호 · 윤종오 · 김정재 · 정갑윤 · 이우현 · 김선동 · 이종배 · 정태욱 · 이종명 · 홍의락 · 함진규 · 박성중 · 김규환 · 강석호 · 황영철 · 이철우 · 이명수 의원 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노웅래 · 정성호 · 조승래 · 안규백 · 이원욱 · 정춘숙 · 주승용 · 김민기 · 조배숙 · 박경미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김중로 · 오세정 · 송기석 · 신용현 · 이용주 · 윤영일 · 김종희 · 김삼화 · 최도자 · 김광수 · 이용호 · 장정숙 · 권은희 · 김성식 · 김경진 · 이종명 · 이상돈 · 박주현 · 정동영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노웅래 · 정성호 · 조승래 · 안규백 · 이원욱 · 정춘숙 · 주승용 · 김민기 · 조배숙 · 박경미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박주선 · 주승용 · 김관영 · 박홍근 · 홍익표 · 안규백 · 정성호 · 도종환 · 이찬열 · 노웅래 · 김동철 · 장병완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송기석 · 이동섭 · 박주선 · 이용주 · 김경진 · 이연주 · 장병완 · 유성엽 · 이상돈 · 김한정 · 김관영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인재근 · 기동민 · 한정애 · 홍영표 · 김현미 · 장병완 · 박주선 · 우상호 · 김철민 · 유은혜 · 김현권 · 소병훈 · 박남춘 · 장정숙 · 강창일 · 김상희 · 이춘석 · 김영진 · 홍익표 · 황희 · 우원식 · 오영훈 · 이개호 · 전해숙 · 위성곤 · 정춘숙 · 김경진 · 윤호중 · 윤관석 · 문미옥 · 제윤경 · 진선미 · 심상정 · 이인영 · 김태년 · 도종환 · 유성엽 · 김영춘 · 양승조 ·

김민기 · 신경민 · 윤후덕 · 이철희 · 민병두 · 박홍근 · 박완주 · 김두관 · 김종대 · 송영길 · 이해찬 · 김정우 · 박재호 · 신창현 · 백재현 · 홍의락 · 박경미 의원 발의)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인재근 · 기동민 · 한정애 · 홍영표 · 김현미 · 장병완 · 박주선 · 우상호 · 김철민 · 유은혜 · 김현권 · 소병훈 · 박남춘 · 장정숙 · 강창일 · 김상희 · 이춘석 · 김영진 · 홍익표 · 황희 · 우원식 · 오영훈 · 이개호 · 전해숙 · 위성곤 · 정춘숙 · 김경진 · 윤호중 · 윤관석 · 문미옥 · 제윤경 · 진선미 · 심상정 · 이인영 · 김태년 · 도종환 · 유성엽 · 김영춘 · 양승조 · 김민기 · 신경민 · 윤후덕 · 이철희 · 민병두 · 박홍근 · 박완주 · 김두관 · 김종대 · 송영길 · 이해찬 · 김정우 · 박재호 · 신창현 · 백재현 · 홍의락 · 박경미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인재근 · 강창일 · 기동민 · 김경진 · 김두관 · 김민기 · 김상희 · 김영진 · 김영춘 · 김정우 · 김종대 · 김철민 · 김태년 · 김현권 · 김현미 · 도종환 · 문미옥 · 민병두 · 박경미 · 박남춘 · 박완주 · 박재호 · 박주선 · 박홍근 · 백재현 · 소병훈 · 송영길 · 신경민 · 신창현 · 심상정 · 양승조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성엽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인영 · 이철희 · 이춘석 · 이해찬 · 장병완 · 장정숙 · 전해숙 · 정춘숙 · 제윤경 · 진선미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인재근 · 기동민 · 한정애 · 홍영표 · 김현미 · 장병완 · 박주선 · 우상호 · 김철민 · 유은혜 · 김현권 · 소병훈 · 박남춘 · 장정숙 · 강창일 · 김상희 · 이춘석 · 김영진 · 홍익표 · 황희 · 우원식 · 오영훈 · 이개호 · 전해숙 · 위성곤 · 정춘숙 · 김경진 · 윤호중 · 윤관석 · 문미옥 · 제윤경 · 진선미 · 심상정 · 이인영 · 김태년 · 도종환 · 유성엽 · 김영춘 · 양승조 · 김민기 · 신경민 · 윤후덕 · 이철희 · 민병두 · 박홍근 · 박완주 · 김두관 · 김종대 · 송영길 · 이해찬 · 김정우 · 박재호 · 신창현 · 백재현 ·

홍의락 · 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10건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2016. 6. 27. 정부 제출)

6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함진규 · 김기선 · 김규환 · 홍문표 ·  
이정현 · 이장우 · 박덕흠 · 염동열 · 이우현 ·  
이명수 의원 발의)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김종대 ·  
이정미 · 윤소하 · 이찬열 · 윤관석 · 김종훈 ·  
윤후덕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7.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김종대 ·  
이정미 · 윤소하 · 이찬열 · 윤관석 · 김종훈 ·  
윤후덕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김종대 ·  
이정미 · 윤소하 · 이찬열 · 윤관석 · 김종훈 ·  
윤후덕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추경호 · 김정재 · 김광림 · 경대수 ·  
장석춘 · 金成泰 · 이은권 · 이학재 · 광상도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유은혜 · 백혜련 · 윤후덕 · 조승래 ·  
신창현 · 도종환 · 인재근 · 심상정 · 홍의락 ·  
김병욱 · 신경민 · 김영진 · 전재수 · 신동근 ·  
우원식 · 오영훈 의원 발의)

6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7. 정부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7. 김중로 · 오세정 · 신용현 · 이용주 ·  
김중회 · 송기석 · 김삼화 · 김광수 · 최도자 ·  
이용호 · 권은희 · 김성식 · 이동섭 · 김경진 ·  
손금주 · 이종명 · 이상돈 · 박주현 · 정동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7. 김중로 · 오세정 · 신용현 · 김중회 ·  
송기석 · 김삼화 · 최도자 · 김광수 · 장정숙 ·  
이용호 · 김성식 · 김경진 · 이종명 · 이상돈 ·  
정동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7. 노웅래 · 장병완 · 주승용 · 신동근 ·  
이찬열 · 서영교 · 김민기 · 윤후덕 · 조배숙 ·  
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6. 27. 정부 제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2016. 6. 27. 윤소하 · 심상정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추혜선 · 김영호 · 김현권 · 김태년 ·  
정성호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곽상도 · 유승민 · 곽대훈 · 조원진 ·  
김석기 · 추경호 · 김정재 · 정갑윤 · 이우현 ·  
김선동 · 정태욱 · 이종배 · 이종명 · 홍의락 ·  
정용기 · 함진규 · 박성중 · 강석호 · 김상훈 ·  
황영철 · 이철우 · 이명수 의원 발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김경수 · 강병원 · 고용진 · 김영진 ·  
김영춘 · 민홍철 · 박남춘 · 박주민 · 서영교 ·  
서형수 · 송영길 · 송옥주 · 안규백 · 오영훈 ·  
위성곤 · 윤후덕 · 이찬열 · 임종성 · 전재수 ·  
전혜숙 · 조승래 · 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7. 정춘숙 · 윤후덕 · 김상희 · 조정식 ·  
이재정 · 진선미 · 김민기 · 박재호 · 김병욱 ·  
유동수 · 양승조 · 신창현 · 심재권 · 어기구 ·  
이철희 · 소병훈 · 박경미 · 김정우 · 김병기 ·

박주민 · 김부겸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7. 정춘숙 · 윤후덕 · 김상희 · 조정식 · 이재정 · 진선미 · 김병욱 · 양승조 · 심재권 · 어기구 · 이철희 · 소병훈 · 김정우 · 문미옥 · 김병기 · 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6. 6. 27. 정부 제출)

이상 4건 6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8. 정부 제출)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김종태 · 이만희 · 김성원 · 백승주 · 안규백 · 박덕흠 · 이명수 · 홍문표 · 안상수 · 김성찬 · 김태흠 · 황주홍 · 유성엽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최운열 · 김종인 · 송옥주 · 우원식 · 이원욱 · 이찬열 · 윤관석 · 김해영 · 이학영 · 최인호 · 김현미 · 정재호 · 박찬대 · 박용진 · 박주민 · 제윤경 · 송영길 · 김정우 · 권미혁 · 민병두 · 박경미 · 변재일 · 노웅래 · 전해철 · 박재호 · 김영주 · 신경민 · 윤후덕 · 금태섭 · 서형수 · 신창현 · 이언주 · 강병원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김중로 · 김삼화 · 이동섭 · 김경진 · 김종대 · 이종명 · 이상돈 · 최도자 · 박주현 · 정동영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최운열 · 김종인 · 우원식 · 이원욱 · 이찬열 · 윤관석 · 김해영 · 송옥주 · 이학영 · 최인호 · 김현미 · 정재호 · 박찬대 · 박용진 · 박주민 · 제윤경 · 송영길 · 김정우 · 권미혁 · 민병두 · 박경미 · 변재일 · 노웅래 · 전해철 · 박재호 · 김영주 · 신경민 · 윤후덕 · 금태섭 · 서형수 · 신창현 · 이언주 · 강병원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최운열 · 김종인 · 우원식 · 이원욱 · 이찬열 · 윤관석 · 김해영 · 송옥주 · 이학영 · 최인호 · 정재호 · 박찬대 · 박용진 · 박주민 · 제윤경 · 김현미 · 송영길 · 김정우 · 권미혁 · 민병두 · 박경미 · 변재일 · 노웅래 · 전해철 · 박재호 · 김영주 · 신경민 · 윤후덕 · 금태섭 · 서형수 · 신창현 · 이언주 · 강병원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최운열 · 김종인 · 우원식 · 이원욱 · 이찬열 · 윤관석 · 김해영 · 송옥주 · 이학영 · 최인호 · 김현미 · 정재호 · 박찬대 · 박용진 · 박주민 · 제윤경 · 송영길 · 김정우 · 권미혁 · 민병두 · 박경미 · 변재일 · 노웅래 · 전해철 · 박재호 · 김영주 · 신경민 · 윤후덕 · 금태섭 · 서형수 · 신창현 · 이언주 · 강병원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최운열 · 김종인 · 우원식 · 이원욱 · 이찬열 · 윤관석 · 김해영 · 송옥주 · 이학영 · 최인호 · 김현미 · 정재호 · 박찬대 · 박용진 · 박주민 · 제윤경 · 송영길 · 김정우 · 권미혁 · 민병두 · 박경미 · 변재일 · 노웅래 · 전해철 · 박재호 · 김영주 · 신경민 · 윤후덕 · 금태섭 · 서형수 · 신창현 · 이언주 · 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7건 6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이상민 · 안규백 · 안민석 · 이원욱 · 이종걸 · 문미옥 · 김경수 · 홍익표 · 오제세 · 김상희 의원 발의)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박광온 · 김해영 · 김병관 · 김정우 · 조웅천 · 권철승 · 최인호 · 권미혁 · 기동민 · 임종성 · 정춘숙 · 김종민 · 조승래 · 백혜련 · 이찬열 · 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5건 2016. 6. 28. 정부 제출)

이상 5건 6월 2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김철민·윤후덕·이철희·서영교·이해찬·박남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김태년·박주선·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8. 정부 제출)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김삼화·김경진·김태흠·이용호·김종희·김동철·이동섭·김광수·유성엽·김관영·박주선·황주홍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희·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희·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8. 정부 제출)

이상 4건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이학영·정성호·김종대·오제세·서형수·김현권·김정우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박광온·김혜영·김병관·김정우·조웅천·권철승·최인호·권미혁·기동민·임종성·정춘숙·김종민·조승래·백혜련·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전혜숙·최도자·김정우·안규백·이찬열·황희·도종환·신경민·정재호·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8.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승희·김규환·신보라·김순례·홍문중·윤종필·金成泰·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광수·채이배·박주현·이용주·정인화·김종희·최경환(국)·최도자·김삼화·윤영일 의원 발의)

6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9. 김중로·박주선·조배숙·장정숙·신용현·박지원·박주민·이용호·김동철·김삼화·김종대·정성호·김종희·김영춘·황주홍·안규백·이동섭·김관영 의원 발의)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박덕흠·황영철·박명재·홍문표·주광덕·경대수·임종성·이우현·윤관석·정용기·김성태·이학재·이명수 의원 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9. 최명길·이원욱·김경협·고용진·김영진·김두관·한정애·박용진·노웅래·



백혜련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경협·신경민·이용득·제윤경·우원식·김정우·권미혁·김현권·김병욱·소병훈·서형수·윤후덕·남인순·신창현·정성호·최도자·송옥주·이정미·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

6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9. 정부 제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에 회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이원욱·전재수·홍익표·김영진·권칠승·오영훈·황희·최명길·박재호·박남춘·이찬열 의원 발의)

6월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광수·채이배·박주현·이용주·정인화·김종회·최경환(국)·최도자·김삼화·윤영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광수·채이배·박주현·이용주·정인화·김종회·최경환(국)·최도자·김삼화·윤영일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경협·신경민·이용득·제윤경·우원식·김정우·권미혁·김현권·김병욱·소병훈·서형수·윤후덕·남인순·신창현·정성호·최도자·송옥주·이정미·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6. 6. 29. 정부 제출)

이상 4건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9. 정부 제출)

**보건 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정춘숙·양승조·김상희·심상정·신동근·도종환·이용득·이정미·기동민·오영훈·설훈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김경진·정성호·홍의락·최도자·이학영·오제세·서영교·이재정·김현권·김정우·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약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승희·김규환·신보라·김순례·홍문종·윤종필·김상훈·김철민 의원 발의)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2016. 6. 29. 송옥주·강병원·강훈식·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수·김관영·김민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재호·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형수·설훈·소병훈·송기현·신창현·심재권·안규백·어기구·오제세·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용득·이재정·이정미·이철희·이학영·이훈·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재호·제윤경·조승래·최운열·최인호·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9. 김경협·신경민·이용득·제윤경·우원식·김정우·권미혁·김현권·김병욱·소병훈·서형수·윤후덕·남인순·신창현·정성호·최도자·송옥주·이정미·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9. 이찬열·전혜숙·윤호중·김해영·전현희·김현미·박주선·황희·윤관석·윤후덕·이원욱·강훈식·최도자·안규백·박명재·어기구·안상수·조정식 의원 발의)

6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홍의락·김종훈·윤종오·박용진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윤상현·김정재·민경욱·박맹우·배덕광·윤영석·이종배·이철규·이현승·정유섭·정태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김삼화·김중로·윤영일·박지원·김종희·이동섭·최도자·최경환(국)·신용현·김관영·김동철·유성엽 의원 발의)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의결 요청안**

(2016. 6. 3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출)

이상 2건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기동민·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강석호·박명재·여상규·함진규·김정재·정유섭·이군현·정갑윤·주광덕·박덕흠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김동철·이찬열·이용호·김삼화·김경진·서형수·민홍철·황주홍·이동섭·박남춘·최도자·정동영·전혜숙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

최명길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이상 7건 7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오세정·유성엽·김경진·이상돈·신용현·이용호·김중로·장정숙·송기석·김성식·이태규·金成泰 의원 발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박정·정성호·윤후덕·손혜원·김철민·홍의락·노웅래·소병훈·김병욱·김현권·우원식·김경수·김한정·김영호·유은혜·신창현·송기현·권칠승·표창원·설훈·김영주·유동수·송옥주·조웅천·위성곤·오영훈·전해철·백혜련·기동민·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2016. 6. 30.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이상 2건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6. 6. 30. 정부 제출)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박정·정성호·윤후덕·손혜원·

김철민 · 홍의락 · 노웅래 · 소병훈 · 김병욱 · 김현권 · 김영주 · 유동수 · 송옥주 · 조응천 · 위성곤 · 오영훈 · 전해철 · 백혜련 · 기동민 · 제윤경 · 우원식 · 김경수 · 김한정 · 김영호 · 조승래 · 유은혜 · 신창현 · 송기현 · 권칠승 · 표창원 · 설훈 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박정 · 정성호 · 윤후덕 · 김철민 · 홍의락 · 소병훈 · 김병욱 · 김현권 · 유은혜 · 신창현 · 김영주 · 유동수 · 송옥주 · 조응천 · 위성곤 · 오영훈 · 전해철 · 백혜련 · 기동민 · 제윤경 · 우원식 · 김경수 · 김한정 · 김영호 · 송기현 · 권칠승 · 표창원 · 설훈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박정 · 정성호 · 윤후덕 · 손혜원 · 김철민 · 홍의락 · 노웅래 · 소병훈 · 권칠승 · 김병욱 · 김현권 · 김영주 · 유동수 · 송옥주 · 조응천 · 위성곤 · 오영훈 · 전해철 · 백혜련 · 기동민 · 제윤경 · 우원식 · 김경수 · 김한정 · 김영호 · 유은혜 · 신창현 · 송기현 · 표창원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6. 30. 정부 제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 박주선 · 박광운 · 이춘석 ·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 이용주 · 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김종태 · 이종명 · 안규백 · 박덕흠 · 이명수 · 박맹우 · 김성태 · 김학용 · 이학재 · 이우현 · 김중로 의원 발의)

7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홍익표 · 이원욱 · 이종걸 · 추미애 · 권칠승 · 김한정 · 백혜련 · 문미옥 · 한정애 · 윤관석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주승용 · 최도자 · 김동철 · 박주선 · 박광운 · 이춘석 · 장정숙 · 강창일 · 김관영 · 이용주 · 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안**

(이상 7건 2016. 6. 30. 정부 제출)

이상 7건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홍익표 · 김영진 · 이원욱 · 인재근 · 한정애 · 윤관석 · 김병관 · 어기구 · 송옥주 · 박주선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6.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7월 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성호 · 김영춘 · 우원식 · 박주민 · 양승조 · 전해숙 · 김삼화 · 박남춘 · 최인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성호 · 김영춘 · 우원식 · 박주민 · 양승조 · 김삼화 · 박남춘 · 최인호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양승조 · 이개호 · 정성호 · 김광수 · 최도자 · 이재정 · 윤소하 · 설훈 · 서영교 ·

신창현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양승조·이개호·정성호·김광수·최도자·설훈·윤소하·신창현·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백재현·이찬열·이재정·정성호·윤후덕·김정우·신창현·서영교·박정·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박주민·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한정애·이용득·송옥주·박경미·신창현·홍의락·홍익표·김철민·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박주민·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백재현·이찬열·이재정·정성호·윤후덕·김정우·신창현·진선미·서영교·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30.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운·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7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변재일·양승조·유승민·최도자·이찬열·김철민·조승래·김경협·백혜련·주광덕 의원 발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함진규·이학재·강석호·배덕광·김학용·김성태·이장우·신상진·이우현·신보라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신상진·김상훈·김순례·김종태·박성중·박찬우·이완영·이종배·이학재·정우택·함진규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신상진·김순례·김종태·박성중·박찬우·이완영·이종배·이학재·정우택·함진규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이상 6건 7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30. 김삼화·김중로·윤영일·박지원·김중희·이동섭·최도자·최경환(국)·신용현·김관영·김동철·유성엽 의원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조경태·강길부·유기준·김규환·정성호·김도읍·정갑윤·김삼화·유재중·이진복·金成泰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박용진·노웅래·이찬열·윤관석·  
윤후덕·변재일·송영길·표창원·박남춘·  
윤호중 의원 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 오제세·정성호·윤관석·문미옥·  
임종성·민홍철·최도자·박남춘·이찬열·  
양승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 김광림·이현재·추경호·이정현·  
강길부·최고일·박명재·엄용수·이종구·  
조경태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  
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  
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 이동섭·안규백·정동영·송기석·  
김철민·김광수·김삼화·박주선·유성엽·  
김해영 의원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이학재·이현승·정중섭·안규백·  
박완수·이우현·임종성·김현아·윤영일·  
주승용·전현희·김도읍·정동영·김명연·  
서형수·김재경·정성호·이찬열·함진규·  
정태옥·주호영·민홍철·김무성·김관영·  
유승민·김세연·유기준·하태경·원유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 주호영·이채익·권석창·이종배·  
곽대훈·김명연·이학재·유승민·윤재욱·  
정갑윤·정태옥 의원 발의)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주승용·박준영·노웅래·최도자·  
김동철·이춘석·박주선·박광은·김관영·  
장정숙·강창일·이용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신경민·이찬열·황희·박영선·  
진선미·권철승·박정·고용진·문미옥·

홍의락·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 이정미·심상정·노회찬·김종대·  
추혜선·윤소하·김현권·김경협·송옥주·  
정춘숙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김명연·김도읍·권석창·홍철호·  
홍의락·정태옥·이명수·성일종·정갑윤·  
주호영·민홍철·김성원·홍문중·염동열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7. 1 정부 제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16. 7.1. 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  
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  
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  
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  
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이상 1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3. 기동민·인재근·권미혁·이철희·  
홍익표·우원식·전현희·이찬열·김영호·  
정춘숙·김병관·문미옥 의원 발의)

6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심사기간 지정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6. 5.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29일 정보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6. 5.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에 예비심사기간을 7월 12일 09시 30분

까지로 지정함

○요구서 제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6. 7. 1. 민병두 의원 외 120인 제출)

○의견서 제출

공직선거법 등 개정의견

(2016. 6. 23.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

6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송부

○서면질문서 제출

금산불산누출사고에 관한 2차 질문서

(2016. 6. 22. 김종민 의원 제출)

비리검사 수사권에 관한 질문서

(2016. 6. 27. 금태섭 의원 제출)

자료 분실이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서

(2016. 6. 29. 유동수 의원 제출)

산업폐기물 및 수입고철의 방사선 감시·관리에  
관한 질문서

산업폐기물의 방사선 감시·관리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16. 6. 29. 김상훈 의원 제출)

의정자료요구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16. 7. 1. 박주민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자료요구 거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6. 7. 1.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  
되었음

2016. 6. 22. 감사원

2016. 6. 22. 법원행정처

2016. 6. 23. 보건복지부

2016. 6. 2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6. 27. 교육부

2016. 6. 27. 고용노동부

2016. 6. 28. 헌법재판소

2016. 6. 28. 환경부

2016. 7. 1. 산업통상자원부

이상 9건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겠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 6. 2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제출)

6월 2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

(2016. 6. 28. 정부 제출)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시행계획

(2016. 6. 30. 정부 제출)

금융안정보고서

(2016. 6. 30. 한국은행 제출)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겠음